



수시 | 21-11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In the Era of Corona 19,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이태리, 이윤상, 권건우, 남윤형, 전홍규

수시 21-11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In the Era of Corona 19,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이태리, 이윤상, 권건우, 남윤형, 전홍규

■ 저자

이태리, 이윤상, 권건우, 남윤형, 전홍규

■ 연구진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이윤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실 실장

전홍규 오사카시립대 교수

■ 연구심의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현금, 금융 등)을 시행했으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응력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향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보 축적·관리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검토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
- 4 해외(미국, 영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검토를 통해, 고정비용 기준으로 방안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 5 설문조사와 통계 및 계량분석을 통해, 향후 고정비용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축적·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해야 함을 제언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금융 중심(현금, 대출, 보증 등)으로 지원
-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적으로는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및 인건비 기준의 실질적인 지원
- 3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고정비용, 매출 등)를 축적 및 구축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신고제도 도입)와 함께 공공에서 새로운 정보 생산 및 관리

차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4.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제도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의 및 현황	15
2.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태 변화	25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제도	31
4. 시사점	37

제3장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해외 지원제도

1. 미국	43
2. 영국	49
3. 일본	53
4. 시사점	57

제4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및 영향요인 분석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63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	79
3. 시사점	93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1. 정책방향	99
2. 향후 연구방향	103

참고문헌	104
SUMMARY	112
부록	115



CHAPTER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 4. 연구의 기대효과 10

0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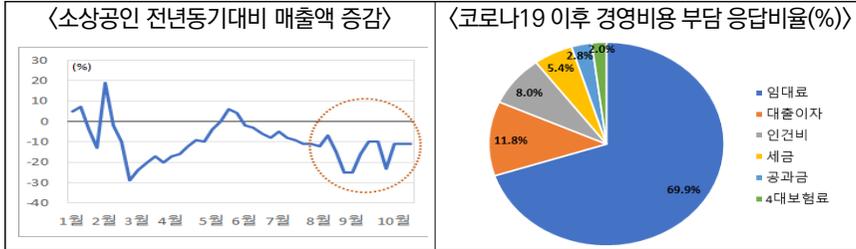
1) 연구 배경

□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현금지원(재난지원금), 금융지원, 경영지원, 임대료 부담완화 조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소상공인의 대응력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연합회(2020)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80.2%에 달하며, 매출에서 5%~25% 비율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영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에서는 임대료의 비중이 약 70%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정비용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출이자 약 12%, 인건비 약 8% 등의 순서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 이 연구를 진행하던 중 저자들이 발행한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Brief(2021.3.2., No. 805)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의 내용임

그림 1-1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매출 변화와 경영비용 부담 비율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관계부처합동 재인용(2020)

자료: 소상공인연합회(2020),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근로시간 조정 또는 기존인력 감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확대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

- 소상공인연합회(2021)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바라는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5대 요구사항은 ①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②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③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④세제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⑤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임

2) 연구 필요성

□ 정부의 경영안정자금, 금융·보증지원, 세액지원 등 코로나19 발현 이후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은 하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실업수당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

3) 연구 목적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기준의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정비용, 매출 등 관련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전국에 걸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영향을 받아 재난지원금 등 지원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시장 및 제도현황 등 일반적인 검토는 전국 단위 혹은 해당 지역 단위로 하되 자료 구득의 한계 상 통계분석, 계량분석, 설문조사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함

(2) 시간적 범위

- 이 연구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현한 2020년 초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 통계 및 계량 분석은 2017년 이후를 대상으로 하되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변화된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2020년 초반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함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변화 검토 시 코로나19 발현 이전과 이

후를 비교하기 위해 1997년부터 이루어진 일반적인 지원제도의 특징을 연대기로 지원 분야별로 기술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지원제도를 차수별, 분야별로 기술함

(3) 내용적 범위

□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법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제도적인 검토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진행함

- 통계현황, 계량분석, 설문조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 통계청 등 자료의 출처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분리되지 않고 한 틀에서 분석을 진행함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고찰 및 현황 검토

□ 국내외의 재난 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지원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이론을 정립하여 분석의 틀을 다지고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한 후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일반적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제도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와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제도적 지원에 대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정책 방향 및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감염병예방법 등 법제도를 검토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에 대한 근거 기반을 마련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인 1~5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차수별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흐름을 정리하여 시사점 도출

(2) 설문을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와 실질적 지원에 대한 인식 조사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피해 상황과 지원상황 및 효과 등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코로나19 이후 피해 상황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지원의 도움 정도 및 어떤 종류의 지원이 실제 도움이 되는지 등을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관련 의견 수렴

(3) 통계 및 계량분석 방법론 등을 이용한 정책 분석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매출액, 임대료, 창·폐업, 공실 등 통계자료를 활용, 비교하여 변화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함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변천, 매출액, 임대료, 고정비용, 폐업업체 수 등을 표기하고자 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과 운영상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향과 임대료나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방향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폐업률에 미친 수익(매출액)과 비용(임대료 등)의 영향도를 분석하여 매출액 기준과 고정비용 기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

(4) 해외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미국, 영국, 일본의 코로나19 이후 해외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 지원정책 등 주요 피해 지원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5) 전문가 자문 및 업무협의회

□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담당자, 서울과 경기도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피해 상황과 지원상황을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얻고자 함

□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 업무 담당자와 함께 대학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자문회의를 실시하고자 함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표 1-1 |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시 실태조사 연구자: 충북연구원(2018) 연구목적: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현황 및 장·단기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법제도분석 해외사례 실태조사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현황 및 특징 분석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해외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 소상공인 실태조사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소상공인 임대료 실태조사 및 부담 완화 대책 연구자: 경남연구원(2020) 연구목적: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법제도분석 실태조사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현황 검토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소상공인 임대료 실태조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연구자: 임태경(2020) 연구목적: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시행한 직접지원금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통계분석 계량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지원금 관련 선행연구 검토 직접지원정책 집행 현황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평행추세 검정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기준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법제도분석 해외사례 설문조사 통계 및 계량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현황 분석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해외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 소상공인대상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 정책효과 분석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 방안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전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지역의 지원제도의 효과와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짐

- 정갑수, 설병문(2016)은 자금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컨설팅지원제도가 경남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음
- 김영문, 강태균(2018)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전북지역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제도 중 자금지원제도와 컨설팅지원제도가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 황선재, 허철무(2019)는 서울, 경기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성향, 시장환경과 경영교육만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경영교육만족과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분석함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한 연구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수행됨

- 박희석 외(2020)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소상공인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내수와 외래관광객으로 구분하고 기간별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수 피해액은 총 4조 4137억원, 외래관광객 관련 피해액은 총 5조 2311억원으로 추정
- 임태경(2020)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의 집행이 취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결과 직접지원금과 취업률 간의 실증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밝힘
- 이민정 외(2020)는 충남의 소상공인 선별지급 지원금의 소상공인 경영도움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지원 금액, 행정적 절차 만족도, 지급속도, 연령 등을 고려한 분석결과 지원 금액이 크고 행정적 절차나 지급속도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령의 소상공인일수록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 김재호, 김장영(2021)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점포 수의 변화로 판단하여 분석하였으며, Pearson 상관계수와 Spearman, Kendall상관계수의 관계를 분석하여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점포 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함

2) 본 연구의 차별성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출액 기준의 지원과 함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기준의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고정비용, 매출 등 관련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 매출액 기준 지원 방안과 함께 고정비용 기준 지원 방안 병행과 매출액 및 고정비용 정보 축적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에 대해 집중분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기존 관련 선행연구는 지원제도 개선 방안, 금융지원 방안, 정책 파급효과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연구와 같이 고정비용 기준 지원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함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방향 도출
- 현 매출액 기준 지원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실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는 고정비용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 감염병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 정책방향 도출

- 일상적인 지원과 함께 재난 상황에 의한 긴급 지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함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축적하고 상황을 정량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붕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 극복 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기반 유지

- 현재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재난지원금 형태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견고히 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고정비용 중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는 고용유지를 꾀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를 통한 국민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CHAPTER 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제도

-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의 및 현황 15
- 2.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태 변화 25
-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제도 31
- 4. 시사점 37

0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제도

□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의하고 현황을 검토하며, 이어서 코로나19 발현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태 변화를 살펴본 후, 코로나19 이후의 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의 및 현황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정의

□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첫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둘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하며, 이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 정의¹⁾
- 「소상공인기본법」에서는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및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제2조 참조

-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또는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²⁾

□ 자영업자는 법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계청의 정의를 준용함

-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영업자’가 사용되고 있으나,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음
- 자영업자 개념은 주로 통계적으로 사용되는데, 통계청에서는 자영업자를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개념”으로 정의함
- 자영업자는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통계청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개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소상공인과의 차이점은 첫째, 자영업자는 ‘개인’으로, 법인사업체를 포함하지 않으며, 둘째, 규모적 측면에서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등이라 할 수 있음

2) ①소상공인이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⑤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을 말함

2)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은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³⁾

- 2019년 이전에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사업체 기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했었음
-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계청 기업등록부를 바탕으로 한 기업체 중심의 중소기업 통계를 공식화하면서 소상공인 현황 또한 기업체 기준으로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 2019년 사업체 기준 소상공인은 329만개(3,285,574개)이며,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662만명(6,617,527명)임⁴⁾

- 2019년 사업체 기준 소상공인은 329만개(3,285,574개)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 387만개의 84.8%를 차지하는 수치임
-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662만명(6,617,527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 1,793만명의 3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7년 319만개(3,188,006개)에서 연평균(CAGR) 1.56%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는 2017년 637만명

3) 기업체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로,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을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단위를 말함(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사업체란 영리·비영리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한 소유권 또는 통제아래 재화의 생산·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개의 경영단위를 말하며, 본사, 시자, 지점, 공장, 출장소, 영업소, 상점, 은행, 학교, 학원, 개인교습소, 병원 등을 들 수 있음. 기업체와 사업체를 구분하자면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1개의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경우 장소별로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인식(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현황 (https://www.sbiz.or.kr/sup/custcenter/stastics/stastics1/1219272_1709.jsp, 접속일자 2021.8.23)

(6,365,094명)에서 연평균 1.96%씩 증가함

- 전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5.3%에서 2019년 84.8%로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사자 비중은 2017년 36.8%에서 2019년 36.9%로 0.1%p 증가함

표 2-1 | 사업체 기준 소상공인 및 종사자 추이

(단위: 개, 명, %)

구분	2017	2018	2019	CAGR '17-'19
사업체수	3,188,006(85.3)	3,236,238(84.9)	3,285,574(84.8)	1.52
사업체 종사자수	6,365,094(36.8)	6,424,490(37.4)	6,617,527(36.9)	1.96

자료: 소상공인지원공단, ()안은 전 사업체에서의 비중

□ 2018년 기업체 기준 소상공인은 620만개(6,199,980개)이며, 소상공인 기업체의 종사자는 897만명(8,969,291명)임⁵⁾

- 2018년 기업체 기준 소상공인은 620만개(6,199,980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수 664만개의 9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 기업체의 종사자는 897만명(8,969,291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 2,059만명의 4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 기업체는 2016년 567만개(5,670,104개)에서 연평균(CAGR) 4.57%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기업체 종사자는 2016년 825만명(8,245,781명)에서 연평균 4.29%씩 증가함
- 전체 기업체에서 소상공인 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2%에서 2018년 93.3%로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사자 비중은 2016년 42.0%에서 2018년 43.6%로 1.6%p 증가함

5)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SubStat.do>, 접속일자 2021.8.23)

표 2-2 | 기업체 기준 소상공인 및 종사자 추이

(단위: 개, 명, %)

구분	2016	2017	2018	CAGR '16-'18
사업체수	5,670,104(93.2)	5,875,091(94.0)	6,199,980(93.3)	4.57
사업체 종사자수	8,245,781(42.0)	8,535,841(42.5)	8,969,291(43.6)	4.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안은 전 기업체에서의 비중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MainSubStat.do>, 접속일자 2021.8.23)

□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879,108개 (26.8%)이며, 2018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544,986개(24.9%)임

-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879,108개(2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665,785개, 20.3%), 운수 및 창고업(392,009개, 11.9%), 제조업 (366,026개,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 중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544,986개(24.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1,097,853개, 17.7%), 숙박 및 음식점업(734,324개, 11.8%), 운수 및 창고업(582,499개, 9.4%), 제조업(495,874개, 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1,616,919 명(24.4%)이며, 2018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 중 가장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종 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2,196,366명(24.5%)임

- 종사자수의 경우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1,616,919명(2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407,896명, 21.3%), 제조업(1,186,840명, 17.9%), 운수 및 창고업(473,417명, 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 중 가장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2,196,366명(2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238,983명, 13.8%), 제조업(1,199,198명, 13.4%), 부동산업(1,177,725명,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3 | 사업체/기업체 기준 업종별 소상공인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기준(2019)		기업체 기준(2018)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3,285,574	6,617,527	6,199,980	8,969,291
농업, 임업 및 어업	1,208	2,665	78,907	87,835
광업	1,386	3,841	2,383	4,657
제조업	366,026	1,186,840	495,874	1,199,198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2,004	2,735	74,550	75,57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3,963	8,934	6,308	11,185
건설업	113,627	429,668	421,533	759,584
도매 및 소매업	879,108	1,616,919	1,544,986	2,196,366
운수 및 창고업	392,009	473,417	582,499	650,713
숙박 및 음식점업	665,785	1,407,896	734,324	1,238,983
정보통신업	25,849	50,556	102,144	133,395
금융 및 보험업	9,315	16,844	48,941	55,721
부동산업	128,411	189,426	1,097,853	1,177,7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614	153,077	172,264	256,308
사업시설관리, 지원/임대	47,993	105,234	128,958	169,155
교육 서비스업	134,450	242,622	195,503	246,032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41,933	131,183	39,459	112,659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102,836	181,633	139,109	182,789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296,057	414,037	334,385	411,41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기업체 기준), 중소기업 현황(사업체 기준)

□ 사업체 기준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723,504개(22.0%)의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1,501,152개(24.2%)의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영업을 하고 있음

- 사업체 기준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723,504개(22.0%)의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영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637,437개, 19.4%), 부산

(232,568개, 7.1%), 경남(231,336개, 7.0%), 경북(191,878개, 5.7%), 대구(173,858개, 5.3%), 인천(163,210개, 4.2%), 충남(137,804개, 4.2%), 전남(125,768개, 3.8%), 전북(119,517개, 3.6%), 강원(116,373개, 3.5%), 충북(105,043개, 3.2%), 광주(97,138개, 3.0%), 대전(94,377개, 2.9%), 울산(69,878개, 2.1%), 제주(52,509개, 1.6%), 세종(13,376개, 0.4%)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체 기준으로는 경기도에 1,501,152개(24.2%)의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1,319,534개, 21.3%), 부산(403,490개, 6.5%), 경남(393,398개, 6.3%), 경북(318,365개, 5.1%), 인천(318,288개, 5.1%), 대구(285,964개, 4.6%), 충남(250,133개, 4.0%), 전남(235,200개, 3.8%), 전북(226,394개, 3.7%), 강원(193,309개, 3.1%), 충북(184,487개, 3.0%), 광주(164,637개, 2.7%), 대전(161,610개, 2.6%), 울산(117,201개, 1.9%), 제주(97,579개, 1.6%), 세종(29,239개, 0.5%)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 기준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1,575,198명(23.8%)의 소상공인 종사자가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기업체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2,220,307명(24.8%)의 소상공인 종사자가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음

- 사업체 기준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1,575,198명(23.8%)의 소상공인 종사자가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1,231,556명, 18.6%), 부산(465,009명, 7.0%), 경남(464,713명, 7.0%), 경북(379,181명, 5.7%), 대구(338,888명, 5.1%), 인천(329,804명, 5.0%), 충남(278,795명, 4.2%), 전남(247,737명, 3.7%), 전북(230,275명, 3.5%), 강원(225,904명, 3.4%), 충북(211,919명, 3.2%), 광주(192,858명, 2.9%), 대전(181,074명, 2.7%), 울산(135,023명, 2.0%), 제주(102,345명, 1.5%), 세종(27,248명, 0.4%)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체 기준으로는 경기도에 2,220,307명(24.8%)의 소상공인 종사자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1,855,681명, 20.7%), 부산

(591,432명, 6.6%), 경남(577,591명, 6.4%), 경북(467,526명, 5.2%), 인천(461,459명, 5.1%), 대구(421,806명, 4.7%), 충남(361,430명, 4.0%), 전남(331,904명, 3.7%), 전북(317,890명, 3.5%), 강원(278,658명, 3.1%), 충북(269,427명, 3.0%), 광주(236,452명, 2.6%), 대전(231,706명, 2.6%), 울산(167,316명, 1.9%), 제주(138,976명, 1.5%), 세종(39,730명, 0.4%)의 순으로 나타남

표 2-4 | 사업체/기업체 기준 업종별 소상공인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기준(2019)		기업체 기준(2018)	
	사업체수	종사자수	기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3,285,574	6,617,527	6,199,980	8,969,291
서울	637,437	1,231,556	1,319,534	1,855,681
부산	232,568	465,009	403,490	591,432
대구	173,858	338,888	285,964	421,806
인천	163,210	329,804	318,288	461,459
광주	97,138	192,858	164,637	236,452
대전	94,377	181,074	161,610	231,706
울산	69,878	135,023	117,201	167,316
세종	13,376	27,248	29,239	39,730
경기	723,504	1,575,198	1,501,152	2,220,307
강원	116,373	225,904	193,309	278,658
충북	105,043	211,919	184,487	269,427
충남	137,804	278,795	250,133	361,430
전북	119,517	230,275	226,394	317,890
전남	125,768	247,737	235,200	331,904
경북	191,878	379,181	318,365	467,526
경남	231,336	464,713	393,398	577,591
제주	52,509	102,345	97,579	138,9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기업체 기준), 중소기업 현황(사업체 기준)

3) 자영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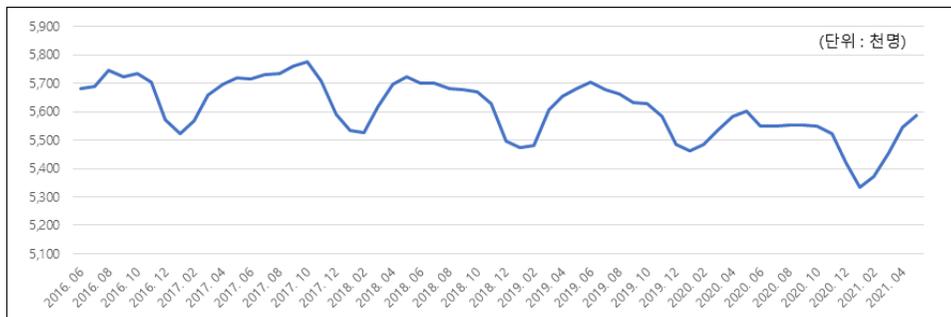
□ 2021년 5월 기준 자영업자는 5,587천명이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6,66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4.2%를 차지⁶⁾

-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17천명으로 자영업자의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0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6.4%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무급가족종사자는 1,075천명으로, 자영업자당 평균 0.19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수는 등락을 반복하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

- 5년 기간을 보았을 때, 2016년 6월 5,681천명이던 자영업자수는 2017년 10월 5,775천명으로 가장 많은 자영업자 수를 보이다가 2021년 1월 5,335천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으며,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림 2-1 | 자영업자 추이(2016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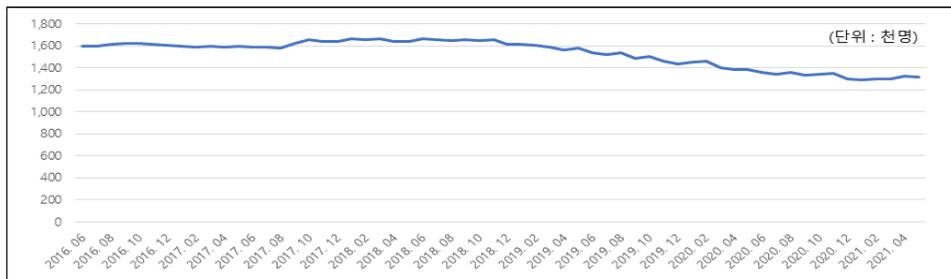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6)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⁷⁾

- 5년 기간을 보았을 때, 2016년 6월 1,597천명이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18년 1월 1,66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1월 1,292천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추이(2016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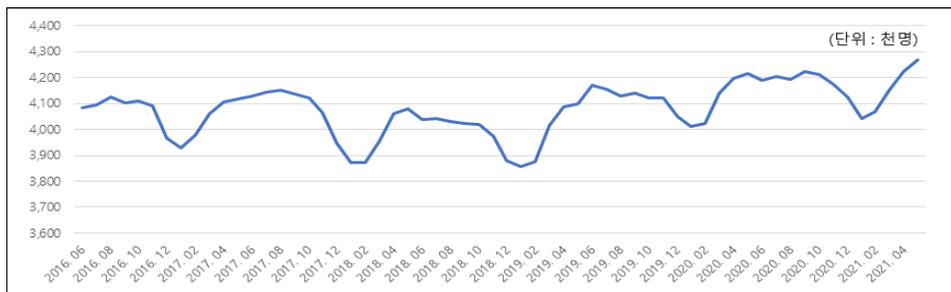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하는 추세⁸⁾

- 5년 기간을 보았을 때, 2016년 6월 4,083천명이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9년 1월 3,858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여 2021년 5월 4,270천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추이(2016년~2021년)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7)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8)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

-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OECD 자영업자 기준⁹⁾) 비중은 국제적으로 비교되는 수치인데,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1989년 38.1%에서 2019년 24.6%로 낮아졌으나,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¹⁰⁾
- OECD에서 제공하는 비임금근로자(Self-employment rate) 자료에서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 36.9% → 2000년 35.8% → 2010년 30.0%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OECD 38개 회원국 중 7위 수준¹¹⁾
- 주로 중남미 국가가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여전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2.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태 변화

1)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기 동향과 그 전망을 파악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 조사(BSI)¹²⁾를 매달 실시

9) OECD에서는 자영업자를 “Self-employment is defined as the employment of employers, workers who work for themselves, 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and unpaid family workers.”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산자조합 회원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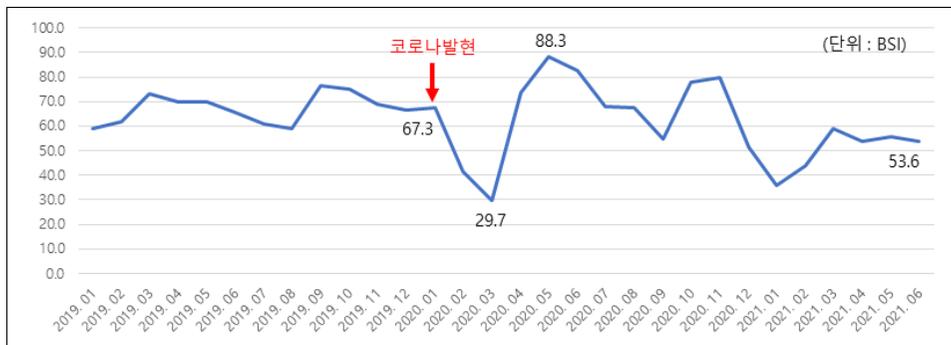
10)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접속일자: 2021.12.02. 10:25

11) 콜롬비아(2020, 51.3%), 브라질(2020, 33.0%), 그리스(2020, 31.9%), 멕시코(2020, 30.5%), 터키(2020, 30.2%), 코스타리카(2019, 30.2%)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미국(2020, 6.3%), 노르웨이(2018, 6.5%), 러시아(2020, 6.8%), 덴마크(2020, 8.5%), 캐나다(2020, 8.6%), 룩셈부르크(2020, 9.4%) 등 선진국은 비중이 낮은 상황임

□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발현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급격히 하락 후 회복하였고, 이후 코로나 확산이 유행될 때마다 급락을 반복

- 코로나19 발현 이전 60~70의 수준을 유지하던 소상공인 경기가 코로나19 발현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초반 29.7까지 낮아지다 단기간에 급격히 회복
- 이후 코로나 확산이 유행될 때마다 급락을 반복, 최근에는 50%대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2-4 | 코로나19 발현 이전/이후 소상공인 체감경기(경기동향지수)



자료: 중소기업부, 각년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 매출 및 자금사정의 경우 경기전반과 유사한 체감경기를 보였는데,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경기가 코로나 발현 시점인 2020년 1월 이후 급격히 하락, 회복 이후 급락을 반복하고 있음

- 매출의 경우 2020년 3월 29.3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2020년 5월 88.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21년 6월 현재 51.5를 기록
- 자금사정의 경우 역시 2020년 3월 31.3으로 하락하다 2020년 5월 87.0으로 최고치를, 2021년 6월 현재 49.5를 기록

12) BSI는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로 전 조사시점과 비교했을 때 현 시점의 경기상황, 매출상황, 자금사정 등을 나타내며 100초과이면 호전, 100미만이면 악화를 나타냄

그림 2-5 | 코로나19 발현 이전/이후 소상공인 체감경기(매출, 자금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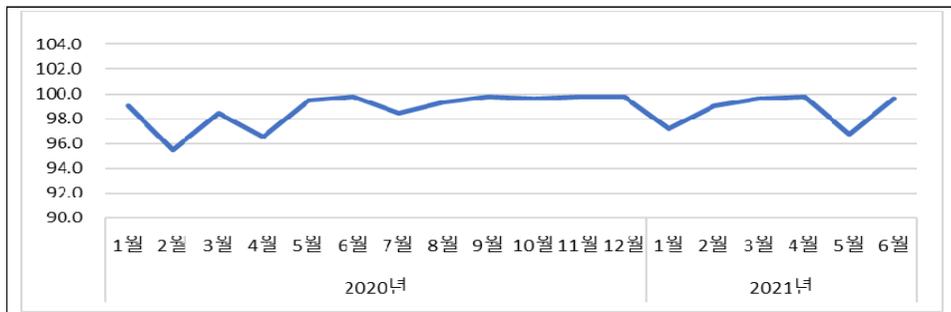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각년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 매출이나 자금사정, 경기전반이 등락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고용¹³⁾의 경우 코로나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은 경기에 대해 크게 체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최소 95.5(2020년 2월)에서 최대 99.8(2020년 6월, 9월, 11월, 12월, 2021년 4월 등)의 범위 내에서 고용에 대한 체감이 나타남

그림 2-6 | 코로나19 발현 이전/이후 소상공인 체감경기(고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각년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13)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중 고용은 2020년 1월부터 조사에 포함되어 코로나 발현 이전 시점과의 비교는 불가함

2) 소상공인 매출액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매주(22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함
-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평소에 비해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2020년 4월 6일 최대치(69.2%)의 매출하락이 나타났고, 이후 조금씩 회복되어 마지막조사인 6월 29일에는 33.4% 수준의 하락을 보였음¹⁴⁾
 - 전통시장은 소상공인과 유사하게 2020년 3월부터 평소에 비해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하였고, 3월 23일 최대치(65.8%)의 매출하락이 나타났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6월 29일에는 평소대비 28.5% 수준으로 하락함¹⁵⁾

표 2-5 |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단위: %)

조사일	2.3	2.10	2.17	2.24	3.2	3.9	3.16	3.23	3.30	4.6	4.13
소상공인	20.8	30.9	32.0	43.1	54.8	57.9	65.2	66.8	66.9	69.2	65.4
전통시장	20.8	34.7	31.7	46.6	57.5	58.9	63.9	65.8	65.5	65.0	65.4
조사일	4.20	4.27	5.4	5.11	5.18	5.25	6.1	6.8	6.15	6.22	6.29
소상공인	64.5	56.7	55.0	54.6	51.3	45.3	38.7	32.0	31.6	31.6	33.4
전통시장	61.1	55.8	56.4	52.6	51.6	39.6	32.5	27.1	26.5	26.6	28.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주1: 질문내용: 평소(코로나19 확산 상황 이전) 대비 매출액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주2: 조사기간: 2020.2.3.~2020.6.29

- 지역별로 보면 2020년 6월말 기준 서울에서 매출이 44.7%로 가장 크게 하락

- 서울 다음으로 경기·인천(44.1%) 등 수도권에서 매출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산·울산·경남(34.3%), 제주(32.5%), 광주·호남(30.8%)

1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15) 이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차 및 3차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에 따라 실시된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하락이 더욱 심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됨

의 순으로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6 |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단위: %)

지역	22주차 (6.29)	21주차 (6.22)	20주차 (6.15)	19주차 (6.8)
서울	44.7	41.9	40.0	33.0
경기·인천	44.1	42.4	41.2	39.5
부산·울산·경남	34.3	29.0	31.9	31.6
제주	32.5	35.0	38.7	38.8
광주·호남	30.8	30.3	31.3	32.4
대전·충청	26.1	24.7	23.2	29.1
강원	23.3	24.6	25.4	30.8
대구·경북	23.0	22.2	21.7	2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주1: 질문내용: 평소(코로나19 확산 상황 이전) 대비 매출액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주2: 조사기간: 2020.2.3.~2020.6.29

□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가 47.5%로 가장 크게 매출하락

- 교육서비스 다음으로 관광·여가·숙박업(47.0%), 가공식품 및 종합소매업(31.5%), 음식점업(30.7%), 농·축·수산물(27.7%), 의류·신발·화장품(26.3%)의 순으로 매출이 하락

표 2-7 | 코로나19 이전 대비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단위: %)

지역	22주차 (6.29)	21주차 (6.22)	20주차 (6.15)	19주차 (6.8)
교육서비스	47.5	41.0	41.2	46.3
관광·여가·숙박	47.0	45.8	50.7	51.1
가공식품 및 종합소매	31.5	30.4	29.8	30.0
음식점	30.7	27.7	27.4	28.7
농·축·수산물	27.7	26.4	25.0	22.7
의류·신발·화장품	26.3	29.3	27.2	25.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주1: 질문내용: 평소(코로나19 확산 상황 이전) 대비 매출액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주2: 조사기간: 2020.2.3.~2020.6.29

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

□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 11월(10월 19일 ~ 11월 5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정도가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01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조사를 실시¹⁶⁾

□ 사업의 경영현황 중 매출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0.8%로 나타났으며, 매출의 감소비율은 평균 37.4%임
- 영업시간과 영업일수의 변화와 관련 질문에 대부분의 사업체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보여 영업시간, 영업일수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매출액 감소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판단됨
- 코로나19 확산 주기에 따른 사업체 영향 정도 조사 결과, 2월말 대구 신천지 중심의 집단감염 시 영향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7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8월 광복절 집회 등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53.1%)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회복 시기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1~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45.3%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2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39.2%로 높게 응답함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업체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67.6%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적 폐업의사(폐업 고민, 폐업 예정 등)를 보인 사업체도 31.7%로 나타남
- 코로나19에 의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1~2년 정도 후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휴업을 선택하거나 버티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임

16) 소상공인연합회(20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심리적 상태가 악화

-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장애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정도를 측정한 결과 걱정 많음, 초조/불안에 대한 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자의 17.1%가 불안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 우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피로, 흥미/즐거움 없음, 희망 없음, 불면 등에 대한 체감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결과에 기초한 우울 정도는 전체 응답자의 20.2%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
- 분노, 불안, 우울 등 세 가지 척도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를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한 결과 특성 우울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큰 것으로 나타남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제도

1) 소상공인 정책의 흐름

□ 소상공인 정책은 1997년「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지원을 시작

- 1997년 당시에는 소상공인의 개념이 없었으나, 1998년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영세하고 작은 점포수준의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직접 작명하였고(내일신문, 2017), 이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라는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지원하기 시작
- 소상공인 정책의 시초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 임금근로자의 급격한 퇴직이 일어나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소상공인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정책자금을 투입한 것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14개 센터를 개소¹⁷⁾
-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조합 간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을 시작
- 창업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정책은 이후 경영안정화, 대기업 자본에 대한 보호 등 경제적·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에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

□ 본격적인 소상공인 지원은 2005년 5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

- 2005년 당시 자영업 비중이 29.5%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보일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었으며¹⁸⁾, 이때는 자금 등 시혜적인 직접지원보다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 과잉진입 예방,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 경영안정 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건전한 자영업 환경조성 등 6대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
- 이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06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59개로 확대하였고, 2005년 시장경영진흥원(지원센터) 설립, 2006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등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감
- 이 조직을 통해 조사 및 연구, 교육, 컨설팅, 조직화·협업화,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지원, 상품권, 카드수수료 등 사업확대, 창업→성장→재기 성장단계별 지원 등이 이루어졌음

□ 2008년 미국발 및 2010년 그리스발 금융위기 이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대두되어 노란우산공제와 햇살론 등의 금융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설치되어 운영

17) 1999년 2월 최초 1개 중앙센터 및 13개 지역센터를 개소하였음

18) 남윤형(2018), “소상공인 위상변화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타당성 검토”, 중소기업정책연구 여름호, pp.95-122.

- 대규모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규제,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의 제도가 마련

□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이 본격화

-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구매, 공동R&D, 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구축 등의 공동사업 중심의 협업이 이루어짐

□ 2014년에 일반 소상공인을 지원하던 소상공인지원원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던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

- 그간 중소기업 창업기금 내 운용되던 소상공인지원계정을 약 2조원 규모의 독립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 정책자금 등 융자사업과 교육 및 컨설팅, 신사업모델 개발, 조직화협업화, 정보제공,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2015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의 영역이 확대

- 2015년 5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개정하여 특별법 형태로 이루어진 법률체계를 일반법으로 전환하였으며, 법률에 근거한 지원대상에서 소기업을 제외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집중하도록 하였음
- 지원 중심에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등 보호와 관련된 지원이 확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였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고, 임대료 증감청구권도 9%에서 5%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 강화
-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제조업 소상공인(소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직접대출), 집적지구 인프라, 기술가치 향상, 판로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 2018년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소상공인에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근거 수립

□ 2021년 2월에 개별 법률들로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포괄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 이 법률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 보호, 시책의 기반조성 등이 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코로나19 이전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크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창업지원, 성장지원, 재기지원, 특화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음¹⁹⁾

2)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 코로나19 장기화,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저금리대출, 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이태리 외, 2021)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지원예산은 14.3조원(1차), 7.8조원(2차), 9.3조원(3차)²⁰⁾, 19.5조원(4차), 15.7조원(5차) 규모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²¹⁾

19) 자세한 내용은 부록2(p119)에 정리

20) 기획재정부(2020)에 따르면, 제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아부담가구, 미취업청년 등,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에 지원함 (김준현, 2020)

21)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접속일자 2021. 7. 20

-
- 1차 지원 방향(2020. 5):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지원(40~100만원) 이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었음
 - 2차 지원 방향(2020. 9):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로 다양한 계층(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육아부담 가구, 생계위기 가구 등)에 지원되었으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동통신비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등이 핵심지원 사업
 - 3차 지원 방향(2021.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 약 580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등) 및 임차료 용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
 - 4차 지원 방향(2021. 3): 매출 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통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짐
 - 5차 지원 방향(2021. 8):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2021. 7. 26.)’ 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하며,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178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 지원)을 통해 피해 지원

표 2-8 | 주요 소상공인 지원대책(1~5차)

정부지원대책	세부내용	지원부처	발표일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 이행 →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이행. 매출감소 →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매출감소율 10%이상) → 최대 4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2021.8.1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 지속 →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 400만원 ·영업 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 300~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2021.3.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자금	·집합금지업종(24만명) → 300만원 ·영업제한업종(81만명) → 200만원 ·일반업종(175만명) →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2021.1.2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용자 지원	·대출금리: 2% 고정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2021.1.9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관계부처 합동	2020.11.12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원	·저금리(연 0.25%) 용자대출: 업체당 3억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 자금대출: 2조원	한국은행	2020.9.23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대상: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중 소상공인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비 등 임대료·인건비를 제외한 재개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한도: 확진자 경유점포 300만원, 휴업점포 1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2020.4.7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원) ·1천만원 초저금리 긴급대출 (5.8조원)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관계부처 합동	2020.3.27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이태리 외, 2021),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중 패키지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소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상권 지원, 임대인 세액 공제 등의 제도를 시행함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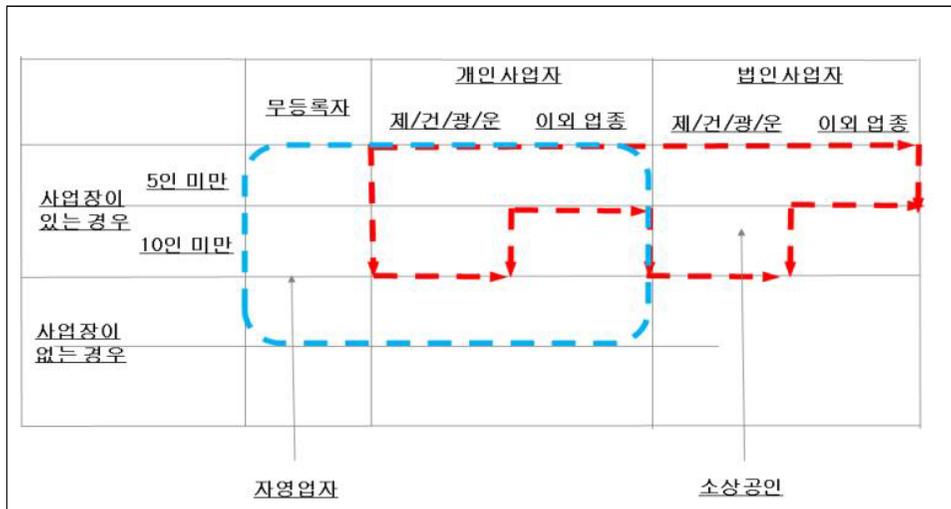
4. 시사점

1)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 확립

□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존재하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 부재

-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의 정의를 준용하지만 근거법은 존재하지 않음
- 소상공인은 업체규모가 기준이고, 자영업자는 사업유형이 기준이므로 법인사업자를 포함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만이 대상임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두 개념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은 영역이 나타남

그림 2-7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분



자료: 신승만. 2018.소상공인 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p.8

22) 자세한 내용은 부록3(p125)에 정리

□ 코로나19 대응 지원은 법적 정의가 존재하는 소상공인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소상공인이라는 법적 정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무등록자나 사업장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통계청의 정의를 준용하는 자영업자의 개념을 관련 법에 독자적으로 적시하거나 혹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의 정의 시 자영업자의 개념 병기 검토 필요

2)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임

- 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G7 국가 평균인 13.7%의 두 배에 육박²³⁾
- 전체 산업 중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25.15%로 OECD 34개국 중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²⁴⁾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보상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

- 코로나19 발현 이후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 매출액, 자금사정 등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며 악화
- 4차에 걸친 대유행 등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생계를 위협
- 매출액 기준의 현금 지원, 저금리의 대출 금융 지원, 세액 공제 등 코로나19

23) 연합뉴스, “자영업자 비중 G7 2배인데 가장 앞선 자영업 손실보상 논의”, 2021.01.04.,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3031200002>

24) 중소벤처기업부, 2019.12,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 규제 애로 갈등 해결방안 연구

대응 정부지원으로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휴업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폐업을 선택

- 코로나19 발현 이전의 일반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코로나19 시대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원하는 보상과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 선호하는 지원 형태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

□ 코로나19 이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 성장, 재기를 위해 자금, 특화, 활성화 등 다양하게 지원

- 소상공인 정책은 1997년 법제정을 기반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2005년 이후 지원정책이 본격화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책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지원사업 발전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창업지원, 성장지원, 재기지원, 특화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재난지원을 확대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경쟁력 제고 지원, 정책자금을 이용한 금융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신규 판로 개척 지원, 전통시장·상권 지원, 세액공제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지원 수행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창업, 성장, 재기와 같은 일상적인 시기에 대한 안정 및 활성화 측면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했다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시기에 대한 지원 체계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고 향후 유사한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관련 정보 축적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CHAPTER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해외 지원제도

1. 미국	43
2. 영국	49
3. 일본	53
4. 시사점	57

0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해외 지원제도**

□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미국, 영국,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지원제도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1) 중소기업청 보증 대출(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d)

□ 중소기업청은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협력 대출기관의 대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보증함으로써, 대출기관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이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중소기업청 보증 대출에는 7(a)대출, 504 대출, 마이크로 대출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7(a) 대출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출이고, 부동산 구매, 장단기 운전자본 마련, 기존 사업 대출의 차환(refinance), 기계, 설비, 가구 등의 구매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7(a)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정의하는 규모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 자본을 투자한 기업에 지원되는데, 해당 기업은 대출의 필요성과 다른 대안이 부재한 것을 증명해야 함
- 7(a) 대출 대부분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150,000

달러 이하 대출의 경우 총대출금의 85%, 150,000달러 초과 대출은 총대출금의 75%를 중소기업청이 보증함

□ 504 대출은 사업체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상환, 고정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데, 중소기업청이 인증하고 규제하는 인증개발회사(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를 통하여 이루어짐. 즉, 대출신청 및 지급은 인증개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 504 대출은 유형 순가치가 1,500만 달러 미만이고, 연방소득세를 제한 평균 순수익이 5백만 달러 미만을 가지며, 중소기업청이 정의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504 대출은 건물, 토지, 시설, 기계, 설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운전자본, 부채상환, 부동산 투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마이크로 대출은 중소기업과 비영리 보육시설 등의 창업과 사업확장을 돕기 위해 5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대출을 제공하며, 평균 대출액은 13,000달러임(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e)

- 마이크로 대출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지역 기반의 비영리단체인 대출기관을 통하여 지급되고, 각 대출기관은 자신들이 마련한 기준의 신용 및 담보 기준을 적용함
- 마이크로 대출은 운전자본, 재고구매, 가구, 기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부채상환과 부동산 구매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최대 상환기간은 6년

2) 급여보호프로그램(Payment Protection Program)

□ 미국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운영하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직원 임금, 임대료 등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목적이고, 차후 대출금 상환면제가 가능하여서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U.S. SBA,

2021a)

- 50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1차 지원에 이어 2차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의 경우 10명 이하 직원의 고용주, 저소득지역의 소액대출을 위해 최소 15만 달러를 책정(U. S. SBA, 2021b)
- 1차 지원 시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직전년도 직원 임금, 자영업자 본인의 순이익, 보험료 등 직원에게 들어가는 부대비용 등을 12로 나누고 2.5를 곱한 금액이며, 약 2.5개월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당 임금, 자영업자 본인의 순이익은 100,000달러까지만 인정됨(U. S. SBA, 2021c)

□ 대출금에 대한 상환면제는 대출 이후 8~14주 기간 동안 대출금이 직원 임금, 임대료 지불 등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60% 이상의 금액이 임금지불에 사용되어야 신청이 가능(U.S. SBA, 2021b)

3) 경제적 재난 대출 프로그램(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f;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g)

- 중소기업청은 경제적 재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일시적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에게 저금리, 장기 상환, 고정금리의 대출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운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
-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임대료, 전기사용료, 고정 부채상환 등 정상적인 운영지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최대 대출한도는 500,000달러이고, 25,000달러를 초과할 때 담보물이 요구되며, 기계류, 장비, 가구 등을 담보로 하는 일반 계약서를 작성함

- 대출액은 공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2020년 일반기업의 경우, 2020년 평균 총 월수입에 12를 곱한 액수에서 판매된 상품의 비용을 뺀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고, 대출 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음
 - 일반기업에는 연 3.75% 고정금리, 비영리단체에는 연 2.75% 고정금리로 제공되고, 상환기간은 30년,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상환은 18개월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가 가능함
-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기업과 거의 모든 유형의 비영리단체가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고, 신용점수는 570점 이상이어야 하며, 2020년 2월 1일 이전에 영업 중 혹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소득세 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함

4) 공연문화 운영자 지원금(Shutterd Venue Operators Grant;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h)

- 공연문화 운영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연문화 행사장 등의 단체에 긴급 지원을 제공함
- 지원 가능한 대상은 라이브 행사장 운영자, 연극 제작자, 공연예술단체 운영자, 박물관 운영자, 영화관 운영자 등이면서 2020년 2월 29일 현재 영업 중인 단체임
 - 2019년 1월 1일에 영업 중인 단체는 2019년 총수입의 45%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2019년 1월 1일 후에 영업 중인 단체는 평균 총월수입의 6배의 지원금을 받게 되나, 총 지원금 액수는 1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제적 손실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2020년 4월부터 12월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총수입의 90% 이상인 경우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70% 이상인 경우가 두 번째 우선순위, 2019년 1/4분부터

2020년 1/4분기 기간에 손실이 총수입의 25% 이상인 경우가 세 번째 우선순위를 가짐

-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는데, 임금, 임대료, 전기사용료, 예정된 부채상환, 용역 대금, 행정 비용, 세금, 보험료, 광고료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5) 음식점 활성화 기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i)

- 중소기업청은 음식점, 주점 등과 같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음식점 활성화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손실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1년 3월 11일,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제정으로 286억 달러 규모의 음식점 활성화 기금 예산이 책정되었음

- 이 기금은 2023년 3월 11일까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정된 용도는 종업원 임금 및 혜택, 부채상환, 임대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비,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구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함

- 기금 보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영업이거나 일시 휴업 중인 사업체 이면서 대중을 상대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음식점, 주점, 제과점 등을 포함하는데, 총수입의 33% 이상을 매장 판매 수익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액은 매장당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000달러 내에서 지급되고 여러 지점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체당 10,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의 액수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익과 이후의 수익의 차이에 기반하여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2019년 1월 혹은 이전에 영업 중이었던 사업체의 경우, 2019년 신고한 총수입에서 2020년 총수입과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금액을

뺀 액수가 지원금의 액수가 됨

- 가장 소규모의 사업체와 소외된 지역의 사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2019년 총수입 500,000달러 이하의 지원자들을 위해 50억 달러를, 총수입 500,000달러 초과 1,500,000 이하의 지원자들을 위해 40억 달러를, 총수입 50,000달러 이하 지원자들을 위해 5억 달러를 따로 유보하여 놓았음

6) 중소기업청 부채 경감 재정지원(SBA Debt Relief;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j)

□ 중소기업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존 중소기업청 보증 대출자에게 초기 부채 경감 재정지원(initial debt relief assistance)을 제공하는데, 6개월분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원함

- 2020년 9월 27일 혹은 그 이전에 승인된 중소기업청 대출자에게로 한정되며, 해당 대출자는 재정지원을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신청됨
- 연기기간(deferment period)이 있는 대출의 경우에는 연기기간 후 첫 번째 월 상환액부터 6개월분에 대하여 지원함
- 또한, 2020년 이전의 기존 재난 대출(disaster loan)의 대출자들에게는 2021년 3월 31일까지로 부채상환 연기기간을 승인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월 상환액이 부과되지 않음

2. 영국

1) 코로나19와 무관한 지원제도

□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창업 관련 대출지원, 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세금감면 지원, 저소득 창업자 보조금 지원, 기술혁신(innovation)을 촉진하는 보조금 및 대출지원, 고용촉진 프로그램 등이 존재함

(1) 창업지원 대출(Start Up Loan; U. K. Government, 2021a)

□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무담보 대출로 25,000파운드 한도에서 이루어짐

- 5년 안에 상환해야 하고, 연 6% 고정금리로 제공하며, 지원 수수료,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의 자영업자가 지원할 수 있음
- 대출 지원 시, 사업계획서, 예상 현금흐름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무상 지원도 제공하며, 대출이 통과되면, 1년간의 무상 멘토링을 제공함

(2) 창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U. K. Government, 2021b)

□ 새로 창업하는 회사의 지분을 구매하는 투자자에게 세금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하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총자산이 200,000파운드 이하이고, 고용인이 25인 미만인 사업이어야 하고,

비상장 기업이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투자금액은 150,000파운드임

(3) 창업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New Enterprise Allowance; U.K. Government, 2021c)

□ 생계급여, 구직수당 등을 받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멘토링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멘토는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고, 멘토가 승인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당 1,274파운드의 보조금을 26주간 받을 수 있고, 창업비용을 위한 대출도 지원할 수 있음

(4) 영국 혁신(Innovate UK) 프로그램(U.K. Government, 2021d)

□ 영국 혁신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영국 기업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게 하는 것을 지원함

-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고, 25,000~10,000,000파운드의 보조금, 100,000~1,000,000파운드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과학, 사회 고령화, 환경오염 없는 성장, 미래 모빌리티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만, 혁신과 기술에 관한 사업이라면 어떤 것도 지원 가능

(5) 킥스타트 신규 고용 촉진 프로그램(Kickstart Scheme; U.K. Government, 2021e)

□ 16세에서 24세 나이의 청년을 위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는 킥스타트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에 지원할 수 있음

-
- 사업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당 25시간 일하는 고용을 6개월 이상 창출해야 하고, 국민연금 납부금도 지불해야 함
 - 사업자는 창출한 고용 당 1,500파운드의 재정지원을 받는데, 이는 초기비용 과 청년의 재고용 역량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2)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소득보조금 지원, 종업원 임금 지원, 세금납부기간 연장, 금융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이태리 외, 2021)

(1) 자영업자 소득 지원 프로그램(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 2020~2021년 동안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자영업자 소득 지원(U.K. Government, 2021f)
 - 소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혹은 동업자 중의 하나(a member of a partnership)여야 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 사업이익이 50,000파운드 이하이어야 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영업 중이지만 수요가 감소했거나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만 소득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능력, 수요의 감소 혹은 영업 중단으로 현저하게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자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영향받아 영업활동이 감소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야 함(U.K. Government, 2021g)

- “영업활동, 능력, 수요의 감소”라는 것의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정부 규제로 인하여 고객 수가 감소했다던가 계약이 취소되었거나 공급체인의 중단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소득지원금은 총매출 감소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총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30% 미만 감소한 경우로 구분됨
- 총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3개월 치 월 평균 영업이익의 80%가 지급되는데, 7,500파운드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총매출이 30% 미만 감소한 경우, 3개월분 월 평균 영업이익의 30%가 지급되며, 2,850파운드를 초과할 수는 없음

(2) 일자리 보전 프로그램(Job Retention Scheme; U. K. Government, 2021h)

□ 고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을 줄 수 없을 때, 종업원을 일시 휴직(furlough)시키고 평상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고용자는 일시 휴직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휴직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함
- 풀타임으로 일시 휴직을 실시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일시 휴직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몇 명을 일시 휴직시킬지 결정할 수 있지만, 직원과 일시 휴직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2021년 5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조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21년 3월 2일 이전에 고용되어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임금을 지불받고 있어야 함

- 풀타임, 파트타임 등 모든 유형의 종업원에 대해서 임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일시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당 정규 임금의 80%를 요구할 수 있으나, 1인당 월 2,500파운드를 초과할 수는 없음(이태리 외, 2021)

-
- 2021년 7월 1일부터는 임금의 70%, 최대 2,187.5파운드를 지불하고, 8월 1일부터는 임금의 60%, 최대 1,875파운드를 지불하며, 9월 30일에 종료됨

(3) 재난복구 대출 프로그램(Recovery Loan Scheme; U.K. Government, 2021i)

□ 재난복구 대출 프로그램은 영국의 사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함

- 사업체당 최대 천만 파운드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대출지원액은 참여하는 금융회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상환기간은 3~6년임
- 사업체가 100%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정부가 80%의 금융지원액을 보증함

□ 대출 지원 신청을 하는 사업체는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다는 것, 파산신청 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

3. 일본¹⁾

1) 일본정책금융공고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책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상태가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으로 일본정책금융공고 및 상공조합중앙금고에서 ‘코비드 19 감염병특별대부’ 및 ‘코비드 19 대책 자본성열후론’ 등을 대출

- 2020년 1월말에 상담창구를 설치 이래 동년 12월 말까지의 용자실적은 약 76만 건, 약 14조6천억 엔에 이룸

1) 일본 경제산업성, 2021a; 2021b

-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책(신용보증제도, 2020년도 추경예산으로 73,336억 엔)’은 2020년 12월 말까지의 보증실적인 약 148만 건, 약 27조 9천억 엔에 이룸

2) 지속화 급부금

□ 코비드 19로 인해 영업 지속 등 영향을 입은 사업자의 사업 계속을 지원

- 1개월간의 매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50% 이상 감소한 중견 기업 및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주 등에 대해, 중소기업 등은 상한 200만엔 한도, 개인사업자 등은 상한 100만엔의 용도 한정을 두지 않는 현금 급부를 실시하였음
- 급부액은 전년의 총매출(사업수입)에서 전년 동월비 50% 월매출의 12배를 감한 액수임

3) 임대료지원 급부금

□ 코비드 19를 계기로 한 2020년 5월의 긴급사태선언의 연장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에 직면한 사업자의 사업계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대와 임대료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실시된 사업임

- 법인은 최대 600만엔, 개인사업주는 최대 300만엔의 현금을 일괄 지급함
- 2021년 2월말 시점으로 약 101만건, 약 8,800억엔의 급부를 실시했고, 2021년 2월 15일까지 약 108만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 약 104만건, 누계 약 9,000억엔의 급부를 실시했음

4) 소규모사업자 경영개선 자금 확충

- 코로나19의 영향을 입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무담보, 무보증인,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마루경용자의 대부한도의 확충과 금리 인하를 실시한 시책임
 - 융자한도액은 통상 한도액에 더하여 1천만원, 이율은 당초 3년간 특별이율 0.9%, 변제기간은 설비자금 10년 이내(4년 거치), 운전자금 7년 이내(3년 거치)임

5)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특례긴급경영안정대부

- 매출감소 등 영향을 입은 소규모기업공제 계약자에 대해 보증금 범위 안에서 소정 비율에 따라 운영주체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한 사업자금 대부, 긴급경영안정대부 대부이율 무이자화, 거치기간 설정, 상환기간 연장 등의 대부요건 완화를 실시했음

6) 투자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책

- 현금급부와 대출관련 사업 이외로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였음
 - 특히 이번 코비드 19로 인해 생산거점이 중국대륙에 집중해 있던 점 등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이 노정된 점과 관련하여,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은 제품이나 소재, 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제품 및 부소재에 대해 생산거점 등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이들 제품 및 부소재의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게끔, 설비 도입 및 생산거점의 다원화 및 고도화 지원을 실시했음

7) 경영환경 정비

- 또한 경영환경의 정비를 지원하고자 경영 상담창구의 개설 및 산업계에 대한 하청배려 요청 등을 실시했음

- 2021년 1월 29일부터 중소기업, 지원기관, 정부계 금융기관 등 1,050개 거점에 창구를 설치하여 경영상담에 대응했음
-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입은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발주업자가 유연한 배려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음

□ 이밖에도 IT와 촉진 지원사업 등의 실시와 판로개척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중소기업자 등이 신상품 및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해 수도권이나 킨키권 등의 대도시권에 대해 테스트마케팅 활동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실마리가 되게끔 지원했음

8) Go To 상점가 사업

□ 감염확대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상점가 등이 실시하는 온라인 활용사업, 새로운 상재개발과 프로모션 제작 등, '지역'과 '상점가'의 장점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한 대응을 지원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시점에서 532건이 채택되었음

9)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 고용조정조성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활동의 축소를 경험한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휴업, 교육훈련 또는 파견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꾀하는 경우에 있어서, 휴업수당, 임금 등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임
- 코비드 19와 작년 7월 폭우로 인한 수해의 영향을 입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를 실시하여, 지급요건을 완화함과 더불어 조성율의 인상, 제출서류의 간소화 등, 제도와 관련한 특례조치를 실시했음

10) 기타 지원사업

- 최저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75.4억엔(추경예산: 20.6억엔)을 총당하여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등을 실시하고 사업장내의 최저임금을 일정액 이상 인상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설비투자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조성함과 더불어, 임금인상노동자 수에 따라서도 조성 상한액(450만엔)을 추가하여 지급

4. 시사점

1) 코로나19 피해 대응 정부지원

- 미국, 영국,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금 지급, 대출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지원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여러 유형으로 존재했고, 코로나19 이후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임
 - 미국의 경우는 종업원의 소득 보전과 특정 업종 보호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체에 대한 대출 및 대출 경감 제도를 시행 중
 - 영국의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과 종업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고, 사업체에 대한 대출제도를 시행 중
 - 일본의 경우는 지속화 급부금, 임대료지원 급부금 등의 현금지원, 코비드 19 감염병 특별대부, 코비드 19 대책 자본성열후론 등의 대출 제도, 기타 지원책들을 시행 중
-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지원금 지급이 시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에서는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가 고용한 종업원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이 우선시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용도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공연문화 운영자나 식당 운영자들을 특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다른 업종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영국에서는 지원금 사용의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반면, 일본의 지속화 급부금은 용도불문의 현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미국과 영국에서의 지원금에 대한 제약이 더 강한 편인데, 행정적 관리비용과 부정수급 가능성 등의 득실을 따져서 결정해야 할 것임. 지급액 사용에 대한 제약이 강해질수록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야 함.
- 피해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자영업자 소득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총매출의 감소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매출 혹은 순수익 등의 기간별 비교가 가능한 국세청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음
- 자영업자의 수익 및 종업원의 임금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역시 국세청의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지원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2) 고정비용 관련 정부지원 시행

- 미국, 영국,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고정비용 관련 지원을 시행
- 미국은 매출지원과 지원금 지급이 지원 형식의 주를 이루며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관련 지원이 이루어짐

-
- 급여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직원 임금, 임대료 등을 지불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어서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볼 수 있음
 - 공연문화 운영자 지원금은 임금, 임대료, 전기사용료, 예정된 부채상환, 용역 대금, 행정 비용, 세금, 보험료, 광고료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고정비용을 대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임
 - 음식점 활성화 기금을 통해 지급되며, 종업원 임금 및 혜택, 부채상환, 임대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비,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 구입비,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 영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소득(매출액 기준)지원과 고정비용 기준 지원을 병행함
- 고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을 줄 수 없을 때, 종업원을 일시적으로 휴직시키고 평상시 임금의 일정부분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고정비용 중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
- 일본은 대출지원과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매출 감소 대상 사업자의 현금지급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관련 지원이 이루어짐
-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대와 임대료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현금 지급
 - 고용조정조성금을 통해 불가피하게 사업활동이 축소된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휴업, 교육훈련 또는 파견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꾀하는 경우에 있어서, 휴업수당, 임금 등의 일부를 조성
-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지원, 대출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고 있음.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 이외에도 미국, 영국, 일본 사례와 같이 고정비용 기준으로 방안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CHAPTER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및 영향요인 분석

-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63
-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 79
- 3. 시사점 93

0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및 영향요인 분석

□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에 부담을 갖는 부분과 선호하는 지원 형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통계 및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시대에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개·폐업)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매출, 고정비용)의 특성과 기여도 변화를 추정하고자 함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설문개요

(1) 설문목적 및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와 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수행

-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지역, 성별, 연령, 업종, 종업원 수, 매출액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경영환경 변화, 부담이 되는 고정비용 항목, 매출액 변화, 고정비용의 변화, 고정비용 중 세부적으로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대출이자 등의 변화로 구성

- 코로나19 발현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수령 유무와 선호하는 지원 형태 등의 질문으로 구성

(2) 설문대상 및 분포

□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총 1,00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

- 서울 지역은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전체 회원 중 498명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응함
- 경기 지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권영향분석서비스’의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전체 회원 중 508명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응함

표 4-1 | 설문에 응한 서울·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

지역	응답수(명)	비율(%)
전체	1006	100
서울	498	49.5
경기	508	50.5

자료: 연구진 작성

□ 설문조사에 응한 서울, 경기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여성, 50대, 서비스업이 많으며, 1인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근소한 차이로 여성이 많음

표 4-2 | 설문에 응한 서울·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성비

지역	남성	여성
전체	49.4%	50.6%
서울	49.0%	51.0%
경기	49.8%	50.2%

자료: 연구진 작성

- 응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5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 60대이상, 30대로 나타남으로써,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건강한 국민경제의 유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수적임

표 4-3 | 설문에 응한 서울·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연령대

지역	20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0.0%	2.2%	14.8%	28.2%	36.4%	18.4%
서울	0.0%	2.6%	17.9%	33.3%	33.7%	12.4%
경기	0.0%	1.8%	11.8%	23.2%	39.0%	24.2%

자료: 연구진 작성

- 응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도소매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식업, 서비스업 순임

표 4-4 | 설문에 응한 서울·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업종별 비율

지역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기타
전체	28.1%	26.8%	37.5%	4.0%
서울	27.8%	42.4%	29.8%	0.0%
경기	28.5%	11.9%	44.8%	7.8%

자료: 연구진 작성

주: 외식업(일반음식점, 카페, 제과, 호프집 등)
 서비스업(학원, 병원, 당구장, PC방, 미용실, 세탁소 등)
 도·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폰가게, 정육점, 의류점, 문구점 등)

- 응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영업장에서 고용 인원을 검토했을 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홀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 | 설문에 응한 서울·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종업원 수

지역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전체	43.5%	29.9%	12.8%	6.7%	3.9%	3.2%	100.0%
서울	43.0%	28.3%	12.4%	7.0%	5.2%	4.0%	100.0%
경기	44.1%	31.5%	13.2%	6.3%	2.6%	2.4%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주: 점주 제외

- 응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의 분포를 검토했을 때, 서울의 경우는 100만원~5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1,000만원~5,0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의 경우 200만원~5,000만원 사이에 분포

표 4-6 | 설문에 응한 서울·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

지역	100만원 이하	1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원 이상	전체
전체	9.6%	32.5%	20.7%	30.2%	5.0%	2.0%	100.0%
서울	9.2%	35.5%	21.1%	28.9%	3.6%	1.6%	100.0%
경기	10.0%	29.5%	20.3%	31.5%	6.3%	2.4%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설문결과

(1)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및 매출액 인식 변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우 나빠진 것으로 인식함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가 매우 나빠졌거나(66.9%) 다소 나빠졌다(24.1%)고 응답함으로써 91% 이상이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특히 일반음식점과 같은 외식업에서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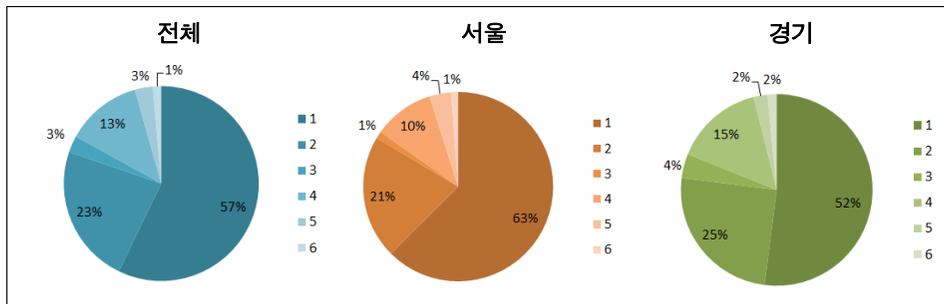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가 매우 나빠졌거나(63.5%) 다소 나빠졌다(27.1%)고 응답함으로써 서울과 마찬가지로 91% 이상이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학원, 병원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식업과 근소한 차이임
- 서울과 경기도 모두 비교적 좋아졌다는 소수의 응답이 존재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외식업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객수가 급감했음에도,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고 전달하는 배달음식업체는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7 |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인식 변화

지역·업종	매우 좋아졌다	비교적 좋아졌다	변화없다	다소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1	2	3	4	5
전체	0.6%	2.3%	6.3%	25.6%	65.2%
서울	0.2%	3.0%	5.7%	24.1%	66.9%
외식업	0.7%	4.4%	7.3%	16.8%	70.8%
서비스업	0.0%	2.9%	4.3%	29.7%	63.2%
도소매업	0.0%	2.0%	6.1%	23.1%	68.7%
경기	1.0%	1.6%	6.8%	27.1%	63.5%
외식업	0.0%	2.1%	4.8%	22.6%	70.5%
서비스업	1.6%	0.0%	4.9%	21.3%	72.1%
도소매업	1.3%	1.3%	6.1%	30.9%	60.4%
기타	2.5%	0.0%	7.5%	37.5%	52.5%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1 |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인식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우 하락했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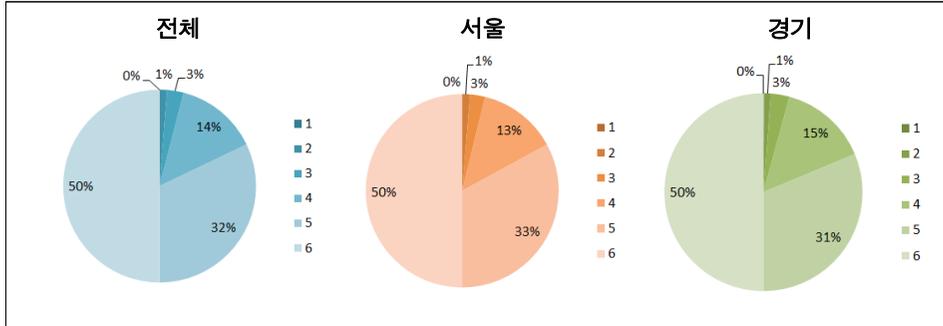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매우 하락했거나(65.9%) 다소 하락했다(26.4%)고 응답함으로써 92% 이상이 매출액 감소가 확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특히 일반음식점과 같은 외식업에서 매출액 감소에 대한 체감이 크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매우 하락했거나(62.6%) 다소 하락했다(29.0%)고 응답함으로써 서울과 마찬가지로 92% 이상이 매출액 감소가 크게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학원, 병원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매출액 감소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외식업과 근소한 차이임
- 서울은 외식업의 경우, 경기도는 도소매업에서 다소 상승했다는 소수의 응답은 이 존재했으며, 비대면 배달영업의 성행으로 매출액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4-8 |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인식 변화

지역·업종	매우 상승했다	다소 상승했다	변화없다	다소 하락했다	매우 하락했다
	1	2	3	4	5
전체	0.1%	2.4%	5.6%	27.7%	64.2%
서울	0.0%	2.6%	5.1%	26.4%	65.9%
외식업	0.0%	4.4%	5.8%	14.6%	75.2%
서비스업	0.0%	1.9%	5.3%	33.0%	59.8%
도소매업	0.0%	2.0%	4.1%	27.9%	66.0%
경기	0.2%	2.1%	6.0%	29.0%	62.6%
외식업	0.0%	0.7%	4.8%	28.1%	66.4%
서비스업	1.7%	0.0%	1.7%	25.0%	71.7%
도소매업	0.0%	3.0%	6.5%	31.2%	59.3%
기타	0.0%	2.5%	7.5%	27.5%	62.5%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2 |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인식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2)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용 인식 변화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중 부담을 느끼는 비용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임대료라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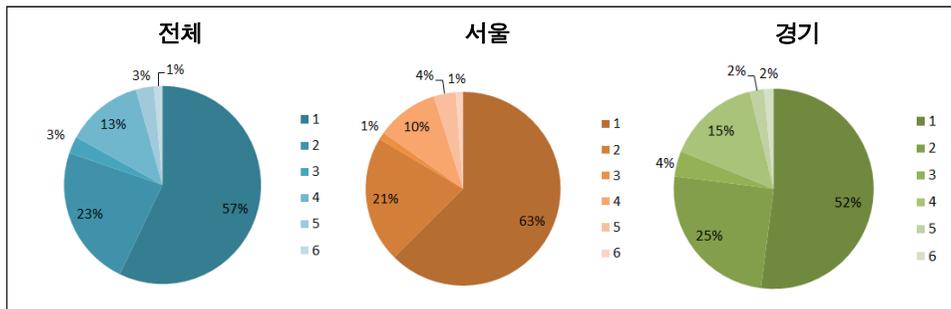
- 서울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 중 임대료가 가장 부담스럽다(62.5%)고 느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21.1%), 대출이자(10.3%) 등의 순으로 응답
- 경기도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 중 임대료가 가장 부담스럽다(52.0%)고 느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25.0%), 대출이자(15.0%) 등의 순으로 응답
- 고정비용의 부담경감 측면에서 실질적인 현금지원과 금융지원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표 4-9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

지역·업종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대출이자	4대 보험료	기타
	1	2	3	4	5	6
전체	57.2%	23.1%	2.7%	12.7%	3.0%	1.4%
서울	62.5%	21.1%	1.2%	10.3%	3.7%	1.2%
외식업	62.8%	27.7%	1.5%	3.6%	2.2%	2.2%
서비스업	67.5%	18.2%	1.4%	8.1%	4.3%	0.5%
도소매업	55.1%	19.0%	0.7%	19.7%	4.1%	1.4%
경기	52.0%	25.0%	4.1%	15.0%	2.3%	1.6%
외식업	52.7%	31.5%	2.7%	11.6%	0.7%	0.7%
서비스업	54.1%	23.0%	3.3%	14.8%	3.3%	1.6%
도소매업	52.6%	23.0%	5.2%	15.2%	2.6%	1.3%
기타	42.5%	20.0%	7.5%	20.0%	2.5%	7.5%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3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영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크게 변화는 없으나 다소 상승했다고 인식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용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47.1%) 다소 상승했다(28.4%)고 응답.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과 같은 외식업에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고정비용 상승에 대한 체감이 크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용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47.4%) 다소 상승했다(25.0%)고 응답. 업종별로는 외식업에 비해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이 고정비용 상승에 대한 체감이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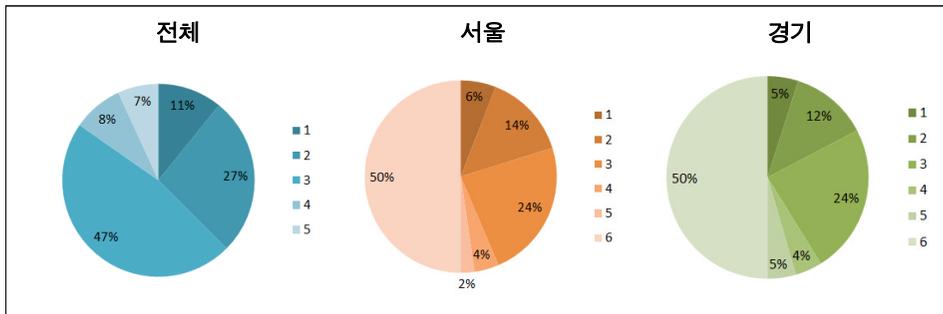
- 서울과 경기도 모두 종합해 볼 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는 확연하다고 인식함에 비해 고정비용 부담의 상승은 크게 인식하지 못함

표 4-10 |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용 인식 변화

지역·업종	매우 상승했다	다소 상승했다	변화없다	다소 하락했다	매우 하락했다
	1	2	3	4	5
전체	10.8%	26.6%	47.2%	8.4%	6.9%
서울	11.6%	28.4%	47.1%	8.3%	4.7%
외식업	16.1%	34.3%	34.3%	9.5%	5.8%
서비스업	10.0%	30.1%	49.3%	5.3%	5.3%
도소매업	9.5%	20.4%	55.8%	11.6%	2.7%
경기	10.1%	25.0%	47.4%	8.6%	9.0%
외식업	8.9%	22.6%	48.6%	10.3%	9.6%
서비스업	19.7%	26.2%	41.0%	6.6%	6.6%
도소매업	8.3%	28.7%	45.7%	8.7%	8.7%
기타	17.5%	17.5%	47.5%	5.0%	12.5%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4 |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용 인식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영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 중 임대료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크게 변화는 없으나 다소 상승했다고 인식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68.6%) 다소 상승했다(17.6%)고 응답.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임대료 상승에 대한 체감이 크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68.8%) 다소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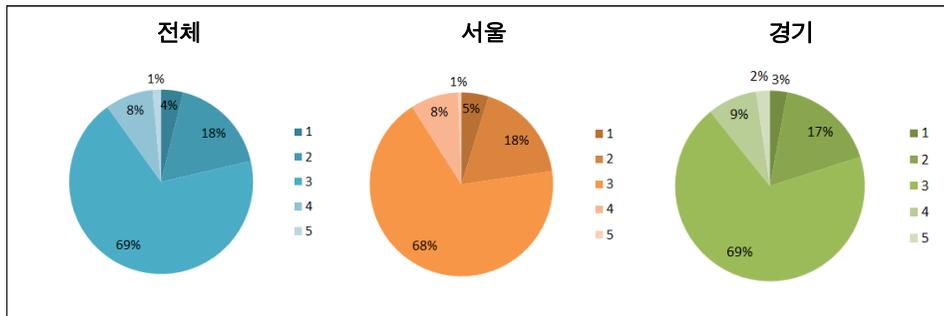
승했다(17.3%)고 응답. 업종별로는 외식업에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임대료 상승에 대한 체감이 크게 나타남

표 4-11 |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인식 변화

지역·업종	매우 상승했다	다소 상승했다	변화없다	다소 하락했다	매우 하락했다
	1	2	3	4	5
전체	3.9%	17.5%	68.7%	8.4%	1.5%
서울	4.9%	17.6%	68.6%	8.3%	0.6%
외식업	5.1%	21.9%	65.7%	6.6%	0.7%
서비스업	4.8%	17.2%	67.9%	9.6%	0.5%
도소매업	4.8%	14.3%	72.1%	8.2%	0.7%
경기	2.9%	17.3%	68.8%	8.6%	2.3%
외식업	1.4%	15.8%	74.0%	5.5%	3.4%
서비스업	8.2%	16.4%	67.2%	8.2%	0.0%
도소매업	1.7%	19.1%	67.8%	9.1%	2.2%
기타	7.5%	15.0%	62.5%	12.5%	2.5%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5 |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인식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영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 중 인건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크게 변화는 없으나 다소 상승했다고 인식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42.0%) 다소 상승했다(33.5%)고 응답.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서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임대료 상승에 대한 체감이 크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48.3%) 다소 상

승했다(32.0%)고 응답. 업종별로는 외식업에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임대료 상승에 대한 체감이 미세하나마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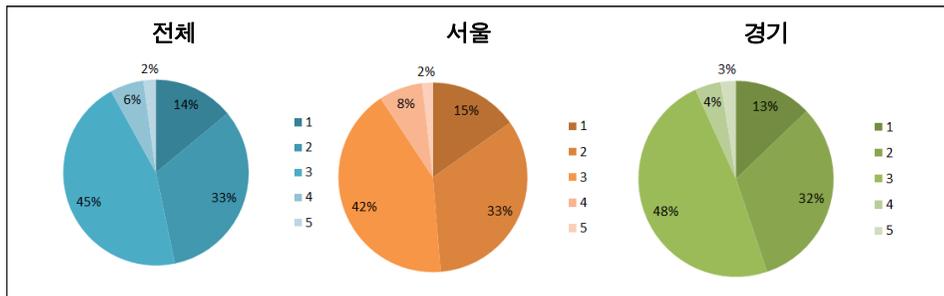
- 서울과 경기도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임대료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했으나 임대료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고 인식하지는 않았으며, 인건비는 다소 상승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4-12 |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인식 변화

지역·업종	매우 상승했다	다소 상승했다	변화없다	다소 하락했다	매우 하락했다
	1	2	3	4	5
전체	14.0%	32.7%	45.2%	5.9%	2.2%
서울	15.2%	33.5%	42.0%	7.5%	1.8%
외식업	24.1%	36.5%	24.8%	10.9%	3.6%
서비스업	14.4%	32.5%	43.5%	8.1%	1.4%
도소매업	8.2%	32.0%	55.8%	3.4%	0.7%
경기	12.9%	32.0%	48.3%	4.3%	2.5%
외식업	13.0%	28.8%	51.4%	3.4%	3.4%
서비스업	23.0%	36.1%	36.1%	3.3%	1.6%
도소매업	10.0%	33.0%	50.9%	3.9%	2.2%
기타	20.0%	30.0%	47.5%	2.5%	0.0%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6 |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인식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영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 중 공공요금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크게 변화는 없으나 다소 상승했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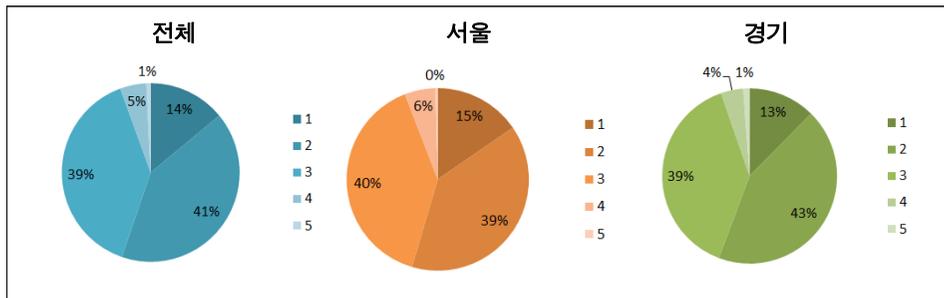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39.6%) 다소 상승했다(39.1%)고 응답. 업종별로는 외식업과 도소매업에서 다소 상승했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매우 상승했다는 인식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부담이 다소 상승했거나(43.3%) 변화가 없다(38.8%)고 응답. 업종별로는 외식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매우 상승하거나 다소 상승했다는 응답이 크게 나타남

표 4-13 |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식 변화

지역·업종	매우 상승했다	다소 상승했다	변화없다	다소 하락했다	매우 하락했다
	1	2	3	4	5
전체	14.0%	41.3%	39.2%	4.8%	0.8%
서울	15.4%	39.1%	39.6%	5.5%	0.4%
외식업	18.2%	40.1%	32.8%	8.0%	0.7%
서비스업	14.4%	37.8%	42.6%	4.8%	0.5%
도소매업	14.3%	40.1%	41.5%	4.1%	0.0%
경기	12.7%	43.3%	38.8%	4.1%	1.2%
외식업	12.3%	41.1%	41.8%	3.4%	1.4%
서비스업	23.0%	47.5%	26.2%	1.6%	1.6%
도소매업	10.4%	43.0%	41.3%	4.3%	0.9%
기타	20.0%	45.0%	32.5%	2.5%	0.0%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7 |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식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영업장 운영 시 고정비용 중 대출이자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크게 변화가 없거나 다소 상승했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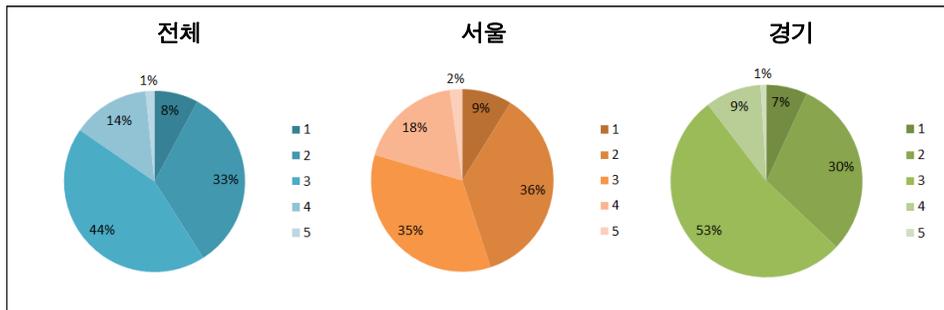
-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출이자 부담이 다소 상승했거나(36.1%) 변화가 없다(34.5%)고 응답.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외식업과 서비스업에 비해 다소 상승하거나 매우 상승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대출이자 부담이 변화가 없거나(52.4%) 다소 상승했다(30.2%)고 응답. 업종별로는 외식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매우 상승하거나 다소 상승했다는 응답이 크게 나타남

표 4-14 | 코로나19 이후 대출이자 인식 변화

지역·업종	매우 상승했다	다소 상승했다	변화없다	다소 하락했다	매우 하락했다
	1	2	3	4	5
전체	7.9%	33.1%	43.6%	13.8%	1.6%
서울	8.7%	36.1%	34.5%	18.5%	2.2%
외식업	8.0%	34.3%	38.7%	16.8%	2.2%
서비스업	7.7%	35.9%	34.9%	19.1%	2.4%
도소매업	10.9%	38.1%	29.9%	19.0%	2.0%
경기	7.0%	30.2%	52.4%	9.4%	1.0%
외식업	3.4%	36.3%	51.4%	7.5%	1.4%
서비스업	16.4%	32.8%	42.6%	8.2%	0.0%
도소매업	7.0%	26.5%	56.1%	10.0%	0.4%
기타	12.5%	32.5%	50.0%	5.0%	0.0%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8 | 코로나19 이후 대출이자 인식 변화



자료: 연구진 작성

(3) 코로나19 이후 정부지원 선호도

□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받은 정부지원 유무에 대한 질문에 높은 비율 (82.1%)의 서울과 경기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았다고 답변

- 서울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93.9%가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 외식업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정부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음
- 경기도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70.8%가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로 외식업이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비해 정부지원을 받은 비율이 높음
- 두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대표되는 외식업에서 지원을 받음으로써 코로나 확대에 기인하여 제한적인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표 4-15 | 코로나19 이후 정부지원 수령 유무

지역·업종	있다	없다
	1	2
전체	82.1%	17.9%
서울	93.9%	6.1%
외식업	96.4%	3.6%
서비스업	95.2%	4.8%
도소매업	89.8%	10.2%
경기	70.8%	29.2%
외식업	83.6%	16.4%
서비스업	77.0%	23.0%
도소매업	66.5%	33.5%
기타	55.0%	45.0%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지원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울과 경기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정비용 기준 현금지원, 매출액 기준 현금지원,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순으로 답했으나 근소한 차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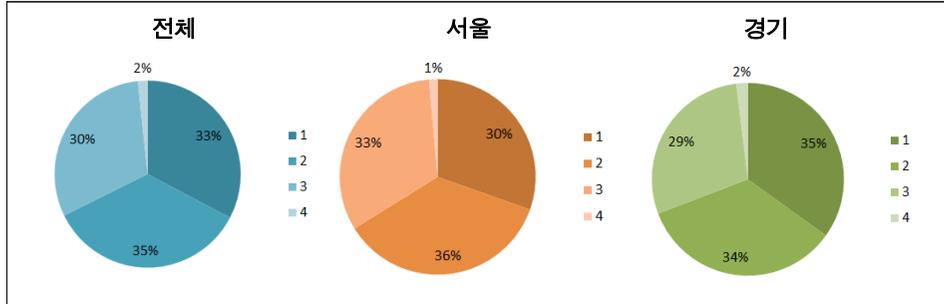
- 서울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고정비용 기준 현금지원(35.7%)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매출액 기준 현금지원 순서로 응답. 업종별로 외식업과 서비스업은 고정비용 기준 현금지원을 선호하나 도소매업은 금융지원을 선호
- 경기도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매출액 기준 현금지원(34.9%)을 가장 선호했으나 고정비용 기준 현금지원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다음으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으로 응답. 업종별로 외식업은 매출액 기준 현금지원, 서비스업은 금융지원, 도소매업은 고정비용 기준 현금지원을 선호
- 두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모두 큰 차이는 없으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것을 선호

표 4-16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지역·업종	매출액 기준 현금지원	고정비용 기준 현금지원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기타
	1	2	3	4
전체	32.7%	35.0%	30.6%	1.7%
서울	30.4%	35.7%	32.5%	1.4%
외식업	34.3%	36.5%	26.3%	2.9%
서비스업	29.7%	36.8%	32.5%	1.0%
도소매업	27.9%	33.3%	38.1%	0.7%
경기	34.9%	34.3%	28.8%	1.9%
외식업	44.5%	27.4%	27.4%	0.7%
서비스업	32.8%	29.5%	34.4%	3.3%
도소매업	33.5%	37.0%	27.0%	2.6%
기타	22.5%	42.5%	32.5%	2.5%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9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자료: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면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 수준의 서울과 경기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했으며 다음은 인건비임
 - 서울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정비용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임대료(52.5%)지원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인건비,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의 지원 순서로 응답. 업종별로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모두 임대료 지원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그 중 외식업이 가장 높음
 - 경기도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정비용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다면 임대료(46.5%)지원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으로 인건비,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의 지원 순서로 응답. 업종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모두 임대료 지원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그 중 서비스업이 가장 높음
 - 두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모두 큰 차이는 없으나 고정비용 중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므로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들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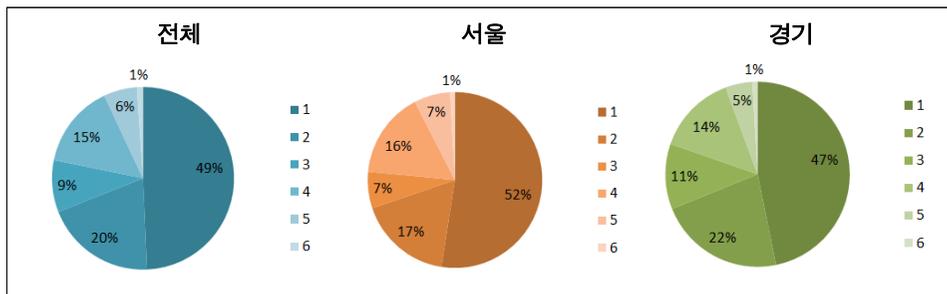
표 4-17 | 코로나19 관련 고정비용 기준 정부지원 비용별 선호도

지역·업종	임대료	인건비	공공요금	대출이자	4대 보험료	기타
	1	2	3	4	5	6
전체	49.3%	19.7%	9.2%	14.8%	5.9%	1.1%
서울	52.5%	17.3%	6.7%	15.9%	6.7%	0.9%
외식업	55.6%	20.8%	8.5%	8.2%	5.6%	1.4%
서비스업	55.3%	14.7%	6.8%	15.6%	7.0%	0.6%
도소매업	45.9%	17.7%	4.9%	23.3%	7.4%	0.9%
경기	46.5%	22.4%	11.8%	13.6%	4.8%	0.9%
외식업	49.8%	24.4%	10.5%	11.9%	2.5%	0.9%
서비스업	46.9%	19.2%	10.7%	17.5%	5.6%	0.0%
도소매업	46.0%	21.4%	12.3%	13.5%	5.9%	1.0%
기타	37.5%	25.0%	15.0%	15.0%	5.8%	1.7%

자료: 연구진 작성

주: 1순위, 2순위 별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 점수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 비율을 계산함

그림 4-10 | 코로나19 관련 고정비용 기준 정부지원 비용별 선호도



자료: 연구진 작성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개요

(1) 분석목적 및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를 서울시를 대상으로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개·폐업 영향요인을 검토 후 각 영향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지원

을 위한 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서울시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축적한 매출액, 임대료, 개·폐업 수 등의 자료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코로나19 전후의 환경변화를 비교하는 통계 분석 수행
- 코로나19의 발현으로 인해 증감이 발생한 서울시 점포의 개·폐업 영향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매출액, 임대료, 이자율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각 영향요인들이 개·폐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여도를 도출하기 위해 계량 분석 수행

(2) 분석대상

□ 서울시 우리마을 상권분석 서비스는 서울시가 다양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플랫폼

- 서울시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보유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상권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창업하고 있는 100개의 생활밀접업종을 선별하여 다양한 상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¹⁾
- 서울시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 창업 예정자 및 자영업자에게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의 위험 감지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1)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policy.seoul.go.kr/introduce1.do>, 접속일자 2021.08.23.)

그림 4-11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개요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policy.seoul.go.kr/introduce1.do>, 접속일자 2021.08.23.)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서는 100개의 생활밀접업종을 기준으로 정보를 생산

- 100개 생활밀접업종은 사업체수가 많고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으며 창업 등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으로 크게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구분됨

표 4-18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100개 생활밀접업종

대분류	업종
외식업 (10개)	한식음식점, 중식음식점, 일식음식점, 양식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분식전문점, 호프·간이주점, 커피·음료
서비스업 (47개)	일반고습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컴퓨터학원, 스포츠 강습,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변호사사무소, 변리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기타법무서비스,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PC방, 전자게임장, 기타오락장, 복권방, 통신기기수리, 스포츠클럽, 자동차수리, 자동차미용, 모터사이클수리, 미용실, 네일숍, 피부관리실, 세탁소, 가전제품수리, 부동산중개업, 여관, 게스트하우스, 고시원, 노래방, 독서실, DVD방, 녹음실, 사진관, 통번역서비스, 건축물청소, 여행사, 비디오·서적임대, 의류임대, 가정용품임대
소매업 (43개)	슈퍼마켓, 편의점, 컴퓨터 및 주변장치판매, 핸드폰, 주류도매, 미곡판매, 육류판매, 수산물판매, 청과상, 반찬가게, 일반의류, 한복점, 유아의류, 신발, 가방, 안경, 시계 및 귀금속, 의약품, 의료기기, 서적, 문구, 화장품, 미용재료, 운동·경기용품,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 완구, 섬유제품, 화초, 애완동물, 중고가구, 가구, 가전제품, 철물점, 약기, 인테리어, 조명용품, 중고차판매,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및 부품, 재생용품 판매점, 예술품, 주유소, 전자상거래업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policy.seoul.go.kr/introduce2.do>, 접속일자 2021.08.23.)

□ 개·폐업 정보, 매출액, 임대료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후의 서울시 상권자료 분석을 통한 기초통계를 살펴보고자 함

- 계·폐업 정보는 당기 개업 또는 폐업한 사업체 정보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영 부담감을 의미함. 개업·폐업 수와 개·폐업률이 존재함
- 개업률과 폐업률은 각각 당기 전체 점포수 대비 개업 또는 폐업한 사업체 비율이며, 전체 점포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기반하여 폐업 이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기간 내 폐업일자가 있는 점포임
- 매출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익 부분 변수이며, 3개 카드사의 카드승인 금액을 기반으로 서울시 보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추정매출액임

표 4-19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추정매출액

항목	정보 출처	주요내용
보정비율	서울시	연별/자치구/행정동/블록별/업종별 보정비율
카드승인금액	BC/KB/SH	월별/자치구/행정동/블록별/업종별 카드승인금액
추정매출액	서울시	추정매출액 = 카드승인금액 ÷ 보정비율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policy.seoul.go.kr/>, 접속일자 2021.08.23.)의 제공정보 안내

-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부분 변수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된 환산임대료²⁾가 제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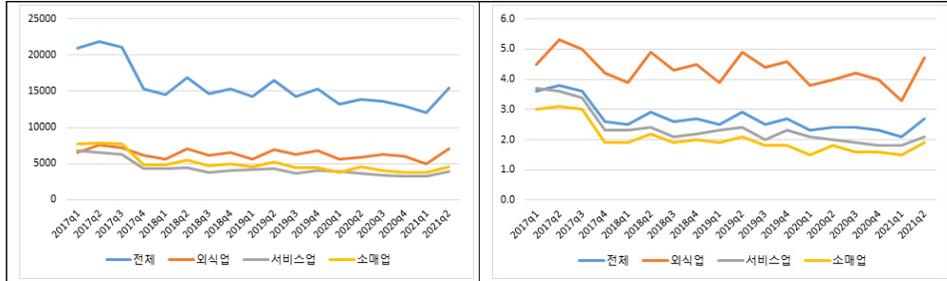
2)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서는 '실제 시세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입지, 건물상태, 인자성에 따라 차이가 큼으로 현장 확인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환산임대료 산식은 '(보증금×12%)/12+월세' 임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결과

(1) 서울시 상권 기초통계

-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서 분류하고 있는 생활밀접업종(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중심으로 개·폐업, 매출액, 임대료 변화를 통해 코로나19 전후의 서울시 상권 기초통계 변화를 검토
 - 분석기간은 자료구득이 가능한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이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후 구분하여 서울시 상권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개업 수는 2017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2021년 2분기 들어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중 대체로 생활밀접업종 중 외식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개업 수가 많은 편이며 2021년 2분기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과 소매업의 개업 수는 2017년 4분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1년 2분기 다소 증가하는 모습임
 -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개업률도 개업 수와 유사하게 2017년 이후 지속 하락해왔으나 최근 외식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업종별 개업률은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순으로 높았으며 하락세를 보이던 개업률은 최근 들어 외식업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임

그림 4-12 서울시 업종별 개업 수와 개업률 변화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전 6개 분기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평균 개업 수는 15,075개, 평균 개업률은 2.7%였으나 코로나19 이후 6개 분기 개업 수는 13,519개, 개업률은 2.4%로 개업 수는 1,556개 감소, 개업률은 0.3%p 하락함
-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6분기 평균 개업수는 420개 감소, 개업률은 0.4%p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6분기 평균 개업 수는 492개 감소, 개업률은 0.3%p 하락하였으며, 소매업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6분기 평균 개업 수는 644개 감소, 개업률은 0.3%p 하락함

표 4-20 | 코로나19 전후 평균 개업수와 평균 개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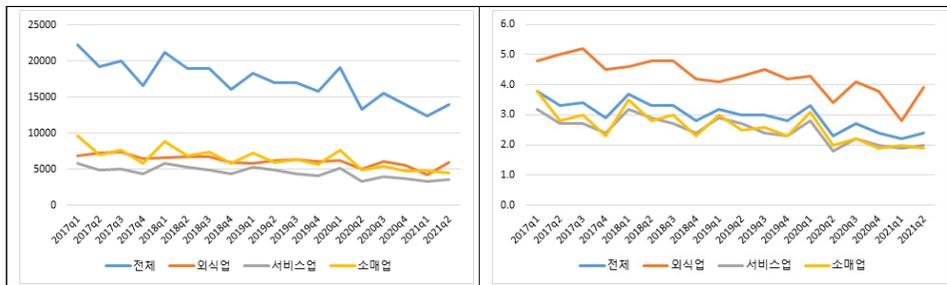
구분		전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개업수 (개)	코로나19 이전 (2018q3~2019q4)	15,075	6,366	4,019	4,690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13,519	5,946	3,527	4,046
	차이	-1,556	-420	-492	-644
개업률 (%, %p)	코로나19 이전 (2018q3~2019q4)	2.7	4.4	2.2	1.9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2.4	4.0	2.0	1.7
	차이	-0.3	-0.4	-0.3	-0.3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폐업 수는 생활밀접업종 3업종 모두 2017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음

- 외식업과 소매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폐업 수가 많은 편이며, 분기별로 다소 계절성은 있으나 3개 업종 모두 분석기간 중 지속 감소하는 모습임. 최근 외식업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함
- 폐업률도 폐업 수와 유사하게 2017년 이후 지속 하락해왔으나 최근 외식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분석기간 중 업종별 폐업률은 외식업이 가장 높았으며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외식업의 폐업률은 2021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하락폭이 컸으나 2021년 2분기 다시 전분기 대비 큰 상승폭을 보임

그림 4-13 서울시 업종별 폐업수와 폐업률 변화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전 6개 분기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평균 폐업 수는 17,199개, 평균 폐업률은 3.0%였으나, 코로나19 이후 6개 분기 폐업 수는 14,684개, 폐업률은 2.6%로 폐업 수는 2,515개 감소, 폐업률은 0.5%p 하락함
-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6분기 평균 폐업 수는 688개 감소, 폐업률은 0.6%p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6분기 평균 폐업 수는 765개 감소, 폐업률은 0.5%p 하락하였으며, 소매업의 경우 코로나19 전후 6분기 평균 폐업 수는 1,062개 감소, 폐업률은 0.4%p 하락함

표 4-21 | 코로나19 전후 평균 폐업수와 평균 폐업률

구분		전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수 (개)	코로나19 이전 (2018q3~2019q4)	17,199	6,195	4,625	6,378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14,684	5,508	3,860	5,316
	차이	-2,515	-688	-765	-1,062
폐업률 (%, %p)	코로나19 이전 (2018q3~2019q4)	3.0	4.4	2.6	2.6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2.6	3.7	2.1	2.2
	차이	-0.5	-0.6	-0.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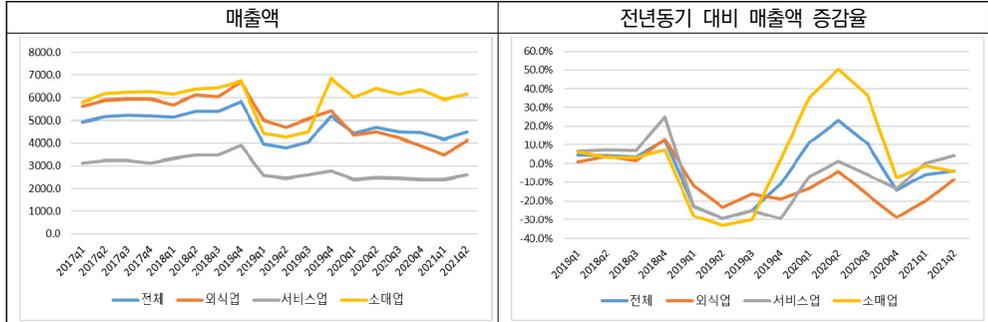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분석기간 중 전반적으로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은 개업과 폐업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업 수가 개업 수보다 많았음
- 코로나19 이후 개업 수의 감소폭보다 오히려 폐업 수의 감소폭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은 그동안 지급 받은 금융지원금(대출금) 일시상환 등 폐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과 포기해야하는 권리금 문제에 따른 폐업 유보 혹은 향후 코로나19 안정기 도래에 대한 희망으로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사료됨

□ 매출액은 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으며, 2018년 4분기 이후 외식업과 서비스업은 대체로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소매업은 2019년 하반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3개 업종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외식업은 2019년 1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2019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
- 소매업 매출액은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들어 다시 상승하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쇼핑 증가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주문과 거래가 소매업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사료됨

그림 4-14 서울시 업종별 매출액 변화



주: 서울시 업종별 매출액은 2019년 이전은 3개 카드사의 승인금액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나 2019년 이후 1개 카드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이후 평균 매출액은 4,707.5만원에서 4,453.9만원으로 253.7만원 감소하였으며, 외식업과 서비스업도 코로나19 이후 평균 매출액이 각각 1,400.7만원, 511.3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매업은 630.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 | 코로나19 전후 평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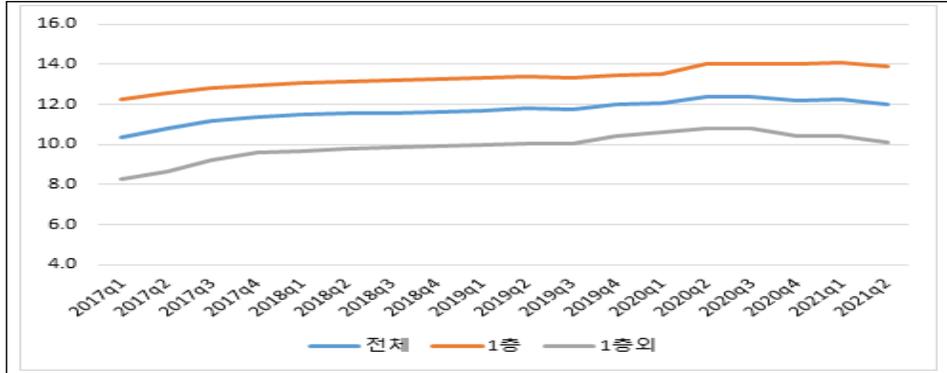
구분		전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매출액 (만원)	코로나19 이전 (2018q3~2019q4)	4,707.5	5,491.2	2,963.8	5,538.7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4,453.9	4,090.5	2,452.5	6,169.0
	차이	-253.7	-1,400.7	-511.3	630.3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임대료는 분석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20년 3분기 이후 1층 외 임대료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남

- 1층 3.3㎡당 월환산임대료는 2021년 1분기 14.1만원으로 분석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였으며, 1층 외 3.3㎡당 월환산임대료는 2020년 3분기 10.8만원 고점 이후 현재까지 소폭 하락세를 유지 중

그림 4-15 서울시 층별 임대료 변화



주: 임대료는 3.3㎡당 월환산임대료임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전체 임대료는 코로나19 이전 3.3㎡당 평균 11.7만원이었으나 코로나19이후 12.2만원으로 0.5만원 상승하였으며, 층별 3.3㎡당 임대료는 코로나19 이후 1층이 평균 0.6만원 상승, 1층외에서 평균 0.5만원 상승함

표 4-23 | 코로나19 전후 평균 임대료

구분		전체	1층	1층 외
임대료 (만원)	코로나19 이전 (2018q3~2019q4)	11.7	13.3	10.0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12.2	13.9	10.5
	차이	0.5	0.6	0.5

주: 임대료는 3.3㎡당 월환산임대료임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서울시 점포 개·폐업 영향요인

□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개·폐업에 매출액, 임대료, 이자율이 미친 영향을 요인별로 분석

- 개·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매출액과 고정비용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점포 순증가수(개업 수와 폐업 수 차이)와 매출액, 고정비용 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고정비용 변수는 임대료와 이자율로 설정함
- 개업 수와 폐업 수, 매출액, 임대료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신규대출금리 중 중시기업대출 이자율을 활용함
- 확보 가능한 자료는 분기단위 자료로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18개 분기 자료이므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의 25개 구를 기준으로 한 패널모형을 구축하였으며 Pooled OLS 모형으로 분석을 수행함

□ 분석결과 전체기간에 대한 모형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임대료와 이자율이 감소할수록 점포의 순증가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점포 순증가수는 약 119개 증가하고, 3.3㎡당 임대료와 이자율이 1% 감소하면 점포 순증가수는 각각 약 240개, 106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기간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기간과 같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임대료와 이자율이 감소할수록 점포의 순증가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점포 순증가수는 약 156개 증가하고, 3.3㎡당 임대료와 이자율이 1% 감소하면 점포 순증가수는 각각 약 191개, 346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에는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점포 순증가수는 약 48개 증가하

고, 3.3㎡당 임대료 1% 감소, 이자율이 1%p 감소하면 점포 순증가수는 각각 약 326개, 491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4 | 순증가 개업 수 결정요인

구분	전체기간 (2017q1~2021q2)	코로나19 이전 (2017q1~2019q4)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log(매출액)	118.64*** (24.22)	156.45*** (31.53)	47.82* (25.83)
log(임대료)	-240.33*** (26.11)	-190.51*** (31.40)	-325.65*** (31.90)
이자율	-105.72*** (14.87)	-346.01*** (51.42)	-490.64*** (40.44)
상수항	996.03** (489.09)	667.95 (655.27)	4332.29*** (544.32)
R-square	0.2209	0.2466	0.6224

주: * p<0.1, ** p<0.05, *** p<0.001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https://golmokpolicy.seoul.go.kr/>, 접속일자 2021.08.23.), 한국은행 경제 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접속일자 2021.08.23.)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매출액 변화에 대한 점포 순증가수(당기 개업 수와 폐업 수의 차)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임대료와 이자율 변화와 같은 고정비용에 대한 점포 순증가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분석은 매출액과 고정비용이 점포의 개·폐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나, 표본이 부족하여 분기단위 자료를 서울의 25개 구를 활용한 패널형태로 구축하여 분석하였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개별 점포 관측치가 아닌 해당 분기의 25개 구의 매출액, 임대료의 평균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함

(3) 서울시 점포 개·폐업 기여도

□ 서울시 점포 순증가수에 매출액, 임대료, 이자율이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 기반의 샤플리 분해(Shapley Decomposition) 방식을 활용함

□ 샤플리 값(Shapley value)은 협조적 게임이론에서 게임 참여자 간 협동으로 얻은 총 이익을 각 참여자의 한계 기여(marginal contribution)만큼 분배하는 균형배분규칙(이성재·이우진, 2017)

- 참여자의 전체집합을 N , 참여자 집단을 S , 실수값을 부여하는 함수 $v : 2^N \rightarrow R$ 을 특성 함수(characteristic function)라 하면 집단 $v(S)$ 는 어떤 집단 S 의 협동으로 얻을 수 있는 총이익임
- 협조적 게임 $\Gamma(N, v)$ 에서 i 번째 참여자의 샤플리값(기여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됨

$$Sh_i(N, v) = \sum_{\substack{S \subseteq N, \\ i \in S}} \frac{(s-1)!(n-s)!}{n!} (v(S) - v(S-i))$$

- 예를 들어 참여자가 3명, $N = \{1, 2, 3\}$ 인 경우 집단 S 의 협동으로 얻는 이익은 $v(S) = \prod_{i \in S} i$ 로 주어진다면 부분집합 S 가 얻는 이익 $v(S)$ 는 표 4-25와 같음

표 4-25 | 부분집합의 이익

부분집합(S)	$v(S)$
\emptyset	0
{1}	1
{2}	2
{3}	3
{1,2}	2
{1,3}	3
{2,3}	6
{1,2,3}	6

자료: 이성재·이우진(2017) p 64 재인용

- 참여자가 3명일 때 배열할 수 있는 순열은 총 $3! = 6$ 가지임
- 순서가 <1 2 3>이라면 각 참여자 1, 2, 3의 한계 기여는 각각 1, 1, 4임
 - 참여자 1의 한계 기여는 $v(\{1\}) - v(\emptyset) = 1 - 0 = 1$
 - 참여자 2의 한계 기여는 $v(\{1,2\}) - v(\{1\}) = 1 \times 2 - 1 = 1$
 - 참여자 3의 한계 기여는 $v(\{1,2,3\}) - v(\{1,2\}) = 1 \times 2 \times 3 - 1 \times 2 = 4$
- 각 순서별로 참여자들의 한계 기여를 구하고 샤플리 값을 구하면 표4-26에서와 같이 참여자 1, 2, 3은 각각 2/6, 14/6, 20/6의 기여도로 나타남

표 4-26 | 참여자별 샤플리 값 분해

구분	참여자 1의 한계 기여	참여자 2의 한계 기여	참여자 3의 한계 기여	합계
<1 2 3>	1	1	4	6
<1 3 2>	1	3	2	6
<2 1 3>	0	2	4	6
<2 3 1>	0	2	4	6
<3 1 2>	0	3	3	6
<3 2 1>	0	3	3	6
합계	2	14	20	36
샤플리 값	2/6	14/6	20/6	6

자료: 이성재·이우진(2017) p65 재인용

- 앞서 분석한 점포 순증가수 결정요인에 회귀분석에 기반하여 샤플리 값(Shapley value)을 구해서 100%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분석 전체기간에서는 매출액 11.60%, 임대료 58.27%, 이자율 30.13%로 점포 순증가수에 임대료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회귀분석 기반 샤플리 값은 매출액 20.69%, 임대료 35.32%, 이자율 43.99%로 이자율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회귀분석 기반 샤플리 값은 매출액 0.72%, 임대료 40.35%, 이자율 58.93%로 이자율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해보면 매출액의 기여도가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든 반면 이자율과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의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7 | 점포 순증가 수 요인별 기여도(샐러리 값)

구분	전체기간 (2017q1~2021q2)	코로나19 이전 (2017q1~2019q4)	코로나19 이후 (2020q1~2021q2)
log(매출액)	11.60%	20.69%	0.72%
log(임대료)	58.27%	35.32%	40.35%
이자율	30.13%	43.99%	58.93%

자료: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이 분석은 매출액과 고정비용(임대료, 이자율)이 점포의 개·폐업에 미친 영향을 기반으로 변수들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음
- 분석결과 코로나19 전후에 매출액과 고정비용이 점포 순증가수 미치는 기여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표본 부족으로 분기단위 자료를 서울의 25개 구를 활용한 패널형태로 구축하여 분석한 점과 서울시에 존재하는 개별 점포 관측치가 아닌 해당 분기의 25개 구의 매출액, 임대료의 평균 자료를 관측치로 활용한 한계가 존재함

3. 시사점

1) 고정비용 기준 지원

□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영업점의 운영에 있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인식

- 서울과 경기도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고, 매출액은 크게 하락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며, 고정비용은 미약하게 상승했지만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수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는 고정비용 기준 현금지원, 특히 부담을 크게 갖고 있는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함

□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향후 고정비용 기준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

2) 상가정보 축적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큰 피해를 입고 매출액은 감소, 임대료는 상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영업점 폐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포의 개·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익 측면에서 매출액, 비용측면에서 임대료, 이자율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했을 때, 매출액 감소는 순증가 개업 수 감소, 임대료 증가는 순증가 개업 수 감소, 이자율 상승은 순증가 개업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이후 절대치가 커짐
- 점포의 순증가 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대료 상승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같은 고정비용 측면이 매출액 감소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고정비용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고정비용 기준 지원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정확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보체계를 마련할 필요

- 현행 매출액 기준 지원 시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일정비율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점포에 대해 지원

- 고정비용 기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정확한 자료가 부재하므로 임대료, 인건비, 대출비용, 제세공과 등 고정비용 항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관리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피해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해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감염병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법제도 보완 필요(이태리 외, 202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2020. 9. 29. 개정에서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등 임대차계약상 불이익을 제한하는 임차인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는 경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이태리 외, 2021)

표 4-28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p>임차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1) 제10조 제1항 제1호(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 (2) 제10조의4 제1항 단서(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사유) 및 (3) 제10조의8(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p>	<p>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 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고 있으며, 제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태리 외, 2021)



CHAPTER 5

결론 및 정책방향

1. 정책방향	99
2. 향후 연구방향	103

05 결론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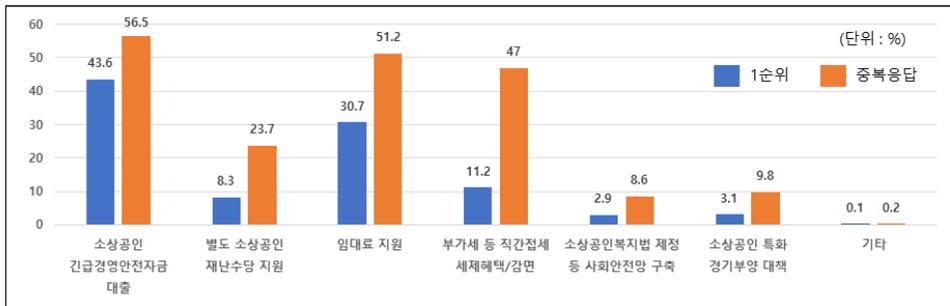
1. 정책방향

1) 단기 정책방향: 실질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재난 상황에 대해 단기적 대책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장기적·근본적 대책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56.5%, 중복응답), 임대료 지원(51.2%),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 혜택/감면(47.0%) 등의 지원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반면,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8.6%)’, ‘소상공인 특화 경기부양 대책 수립(9.8%)’ 등에 대한 정책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 | 코로나19 상황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



자료: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2020.11)

□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융 중심(현금, 대출, 보증 등)의 지원이 필요

- 코로나19 충격은 결국 소상공인 재정악화로 귀결되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면 가계의 부채증가 등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므로 효과가 단기에 크게 나타나는 금융지원을 통해 영업의 지속성 확보 및 폐업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이 필요
- 금융지원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등과 같은 보조금 형태의 재난지원금과 정책자금, 보증과 같은 융자 형태로 구분되며, 특별피해업종, 임대료 등 목적 중심의 지원인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이 외 장기화에 대비한 융자 형태의 투자 및 영업유지 유도가 필요
-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보다는 투자 및 영업유지가 가능한 융자형태가 보다 타당해 보이며, 이 경우에도 소상공인의 취약한 금융 접근성, 조기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규모, 거치기간, 상환방법 등 고려해야 함.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확대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적으로는 매출액 기준 지원과 함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고정비용, 특히 임대료 및 인건비 기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고려할 필요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실업수당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하는 등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이태리 외, 2021)
- 고정비용은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외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국내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므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기준 지원을 통한 피해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이태리 외, 2021)
- 고정비용 중 인건비 기준 지원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앞서 살펴보았듯 1인 사업체가 고용이 이루어진 사업체보다 월등히

많아서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기존 고용업체가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고정비용 기준 지원 중 임대료 기준의 현금지원일 경우 임대료 지급에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증빙 제출과 같은 확인이 필요하며, 인건비 기준 현금지원일 경우 또한 해당 지원에 대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고정비용 기준의 지원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만 작동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지속적 지원에서 관리 시스템의 필요에 대해서 언급함

□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개·폐업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휴·폐업의 위험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개업 수는 상승하였으나 향후 경영안정은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폐업 및 재기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소비의 침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와 휴·폐업의 위험이 크게 상승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건 변화(악화)가 기존에 영업을 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휴업 및 폐업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실업 후 개업을 하였으나 소상공인 분야 과당경쟁으로 다시금 폐업을 겪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짐
- 폐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채무·조세·신용 등의 문제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 채무로부터 파급되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사업정리 및 선제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
-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언급했듯,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40대 이상이고, 특히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사업 실패 후 취업을 통한 재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취업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과밀업종으로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밀업종 재창업을 막을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재창업·취업프로그램 확대가 필요.

2) 중·장기 정책방향: 지속적 지원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정비용, 매출 등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구축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발적 참여와 함께 공공에서 새로운 정보 생산 및 시스템 유지가 필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현재 매출손실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므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수익 부분인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 부분인 고정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자료가 구축되어야 함
- 해당 사업자(지역 회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혹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권 정보시스템 등) 혹은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매출액,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 현재 부재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직접 주기적으로 입력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정보 신고제를 제안함
-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규제 조건 완화,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영역의 정보제공, 지원 시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입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소기업 벤처부와 같은 해당 부처나 지자체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함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정책지원을 위해 업종과밀도¹⁾, 소상공인 건강지수²⁾,

1) '지역상권 과밀업종'이란 지역상권 내 밀집 업종 가운데 과당경쟁 상태일 것으로 평가된 업종을 말하며, 업종과밀도는 이러한 업종이 특정지역에서 과당경쟁인 정도를 말함

2) 소상공인 건강지수는 기존 메디컬 건강지수에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경쟁강도 등 노력에 의한 시간적/정서적 피해를 반영한 지수로 손실보상의 정성적 보상체계를 제시

ex) 산출식 = [점포 변화량(상권정보+매출정보 등)+메디컬 변화량]/2

소상공인 갈등지수³⁾ 등 지수/지표를 개발하여 평상시와 위기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코로나19와 같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상공인 체질 개선이 요구됨

- Garrett Watson & Erica York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김준현, 2020), 경제적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긴 시각으로 보면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생가능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2. 향후 연구방향

1) 지원정책 효과분석

□ 코로나19가 발현한 후 충분한 시계열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제 시행했던 지원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연구한계 개선

□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족되면 이 연구에서 수행했던 계량분석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교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소상공인 갈등지수는 전반적인 소상공인 갈등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소득불균형 정도, 분쟁피해 및 복구 정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 등의 지표로 산출하며, 노동, 농민, 공공 갈등지수 등 소상공인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 산출식 = 소득불균형 지니계수/[(분쟁피해 및 복구 지수+정부효과성지수)/2]

참고문헌

REFERENCE



【인용문헌】

- 경남연구원. 2020. 소상공인 임대료 실태조사 및 부담 완화 대책.
- 관계부처합동. 2020.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11월 12일. 보도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20a.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현안 브리핑 제7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_____ . 2020b.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_____ . 2020c.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현안 브리핑 제1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_____ . 2020d.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현안 브리핑 제3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금융위원회. 202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0월 7일. 보도자료.
- 김영문, 강태균. 2018.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권, 3호: 1-27.
- 김재호, 김장영. 2021. 코로나 19와 서울 소상공인 상권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5권, 3호: 384-388.
- 김준현. 2020.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
- 제18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남윤형. 2015. 소상공인 개념 및 범위기준 검토.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연구원
- 남윤형. 2018. 소상공인 위상변화에 따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타당성 검토. 중소기업정책연구 여름호: 95-122.
- 내일신문. 2017. [기고] 소상공인 조직 육성은 국가 의무. 8월 25일.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248676(접속일자 2021. 7. 25.)
- 박희석, 반정화, 정현철, 김수진. 2020.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정책리포트 제297호. 서울: 서울연구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2021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연합회. 20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 신승만. 2018. 소상공인 지원정책 진단 및 정책방향 연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연합뉴스. 2021. 자영업자 비중 G7 2배인데 가장 앞선 자영업 손실보상 논의. 1월 4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3031200002>(접속일자 2021. 7. 20.)
- 이민정, 김양중, 송민정. 2020.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연구 4권, 1호: 71-89.
- 이성재, 이우진. 2017. 샵리값을 이용한 한국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권, 1호: 57-109.
- 이태리, 이수욱, 이윤상, 최진도, 권건우. 2021.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805호. 세종: 국토연구원.
- 임태경. 2020.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27-146.
- 일본 경제산업성. 2021a. 令和 2 年度において講じた 中小企業施策 <https://www.c>

-
- husho.meti.go.jp/pamflet/hakusyo/2021/PDF/chusho/05Hakusyo_R2sesaku_web.pdf (2021. 8. 24. 접속)
- 일본 경제산업성. 2021b. 令和3年度 中小企業施策 https://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2021/PDF/chusho/10Hakusyo_R3sesaku_web.pdf (2021. 8. 24. 접속)
- 장성호 외. 202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한국세무학회
- 정갑수, 설병문. 2016.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경남지역 소상공인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권, 2호: 221-232.
- 중소기업중앙회. 2020.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2019.,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산업 규제 애로 갈등 해결방안 연구
- _____ . 2020.,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9월 23일. 보도자료
- _____ . 2021. 버팀목자금 지원 현황. 2월 10일. 보도자료.
- _____ . 202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4월 18일. 보도자료.
- _____ . 각년도. 기업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
- _____ . 각년도.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 _____ . 2021.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1~22차)
- _____ . 2019. 중소기업기본통계
- _____ . 2018. 중소기업 현황
- 충북연구원. 2018.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통계청. 각년도. 전국사업체조사

_____.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황선재, 허철무. 2019. 소상공인의 개인성향 및 시장 환경특성과 경영성과 간에 경영 교육 만족도가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 벤처창업연구 14권, 6호: 45-57.

McKinsey & Company, 2020.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covid-19-and-european-small-and-medium-size-enterprises-how-they-are-weathering-the-storm>

OECD. 2014. 「OECD Factbook 2014」

U. K. Government. 2021a. Apply for a Start Up Loan for your business.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apply-start-up-loan>)

U. K. Government. 2021b. Use the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apply-to-use-the-seed-enterprise-investment-scheme>)

U. K. Government. 2021c. Help with moving from benefits to work.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moving-from-benefits-to-work/starting-your-own-business>)

U. K. Government. 2021d. Innovate UK - grand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business-finance-support/innovate-uk-grant-funding-innovation-loans-and-expert-support>)

U. K. Government. 2021e. Kickstart Scheme for employers.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guidance/kickstart-scheme-for-employers>)

U. K. Government. 2021f. Check if you can claim a grant through the Self-Emp

-
- oyment Income Support Scheme.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guidance/claim-a-grant-through-the-coronavirus-covid-19-self-employment-income-support-scheme?priority-taxon=09944b84-02ba-4742-a696-9e562fc9b29d>)
- U.K. Government. 2021g. How your trading conditions affect your eligibility for the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guidance/how-your-trading-conditions-affect-your-eligibility-for-the-self-employment-income-support-scheme>)
- U.K. Government. 2021h. Check if you can claim for your employees' wages through the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guidance/claim-for-wage-costs-through-the-coronavirus-job-retention-scheme>)
- U.K. Government. 2021i. Recovery Loan Scheme. (Accessed on 2021. 2. 8 at <https://www.gov.uk/guidance/recovery-loan-scheme>)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a.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ccessed on 2021. 2. 10.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b. Top-line Overview of First Draw PPP.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top-line-overview-first-draw-ppp>)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c. How to Calculate First Draw PPP Loan Amounts.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document/support-how-calculate-first-draw-ppp-loan-amounts>)
-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d. Loans. (Accessed on 2021. 2. 10.

-
- at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e. Microloans.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microloans>)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f. COVID-19 EIDL.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eidl/covid-19-eidl>)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g. COVID EIDL Loans FAQs.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1-08/COVIDEIDL_FAQs-508.pdf)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h.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shuttered-venue-operators-grant>)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i.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ing Program.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sites/default/files/2021-04/Restaurant%20Revitalization%20Fund%20Program%20Guide%20as%20of%204.28.21-508_0.pdf)
- U. 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j. SBA debt relief. Accessed on 2021. 2. 10. at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vid-19-relief-options/sba-debt-relief>)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 법률 제18507호(12월 29일 개정) 제49조, 제70조.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 법률 제16954호(2월 4일 타법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법률 제17290호(5월 19일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020. 법률 제17471호(7월 31일 일부개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13. 법률 제11846호(5월 28일 일부개정)
소상공인기본법. 2020. 법률 제17623호(12. 8., 일부개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법률 제18292호(7월 7일 일부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18. 법률 제15687호(6월 12일 제정)
중소기업기본법. 2020. 법률 제17626호(12월 8일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2021. 법률 제17818호(1월 5일 일부개정)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접속일자 2021. 08. 23.
소상공인마당, <https://www.sbiz.or.kr>, 접속일자 2021. 07. 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접속일자 2021. 08. 23.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http://www.elabor.co.kr/> 접속일자 2021. 08. 21.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https://golmokpolicy.seoul.go.kr> 접속일자: 2021.
8. 23.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접속일자 2021. 07. 20.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접속일자 2021. 08. 2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 접속일자 2021. 08. 23.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접속일자 2021. 08. 23.

OECD DATA.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접속일자
2021. 8. 22.

SUMMARY



In the Era of Corona 19,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Italy, Lee Yunsang, Kwon Geonwoo

Key words: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Covid19, Supporting Policy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re have been numerous supporting measures (cash or credit) to address the management situations of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However, the management difficulties persist despite these efforts, and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pandemic deteriorates. In that regard,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practical direction of supporting method in addressing the most burdensome fixed cost, especially the rents, by considering the opinions of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e accumul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lated information, such as fixed costs, sales, etc.,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continued support.

First, chapter 2 examines the existing supporting programs of South Korea for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age of Covid19. The overview of the current programs implies that the definition of the self-employed business needs a legal definition, and there needs to be practical

and persistent support for them. The following chapter examines the existing foreign programs supporting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we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It confirms that along with the supporting programs centered around sales, we need to consider re-directing the current supportive measures to assist the fix-cost of these businesses, as i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chapter 4, the changes in contribution rates were estimated with the statistical and econometric analysis of survey data. The results imply the necessity of preparing for the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be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can accumulate and manage accurate data for the sustainable supporting system, which could be the basis for implementing the support programs based on fixed costs.

The short-term and mid/long-term policy directions resulting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time being, we need to focus o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cash, loan, financial guarantees, etc.) so that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can sustain their businesses and ‘survive’ until they overcome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Second,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we need to consider adopting short-term practical support programs for fixed costs, such as rents or labor costs, which they think are burdensome, on top of the sales-centered support programs. Third, because the risk of temporary or permanent closure increases for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due to the Covid19 crisis and the future economic situation is uncertain, there should be supporting policies for business closure or re-opening. Fourth, to provide continuous support, we need to accumulate and establish an information system about fixed costs and sales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 government efforts to create and manage the

information system. Lastly, in preparation for an unexpected situation, such as the Covid19 outbreak, we need to persistently support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establishing a social security system and enhancing their capabilities.

부 록

APPENDIX



부록1: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설문조사 설문지

<p>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p>	<h3>소상공인 지원 방안 설문조사</h3>	 ID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p>안녕하십니까?</p> <p>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p> <p>현재 우리 연구원은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없으며 조사된 내용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p> <p>응답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답례품(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성함과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조사가 완료된 이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조사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p> <p>비백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7월</p>					
주관기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책임자: 이태리 연구위원 조사담당자: 권건우 전문연구원 044-960-0669, gwkwon@krihs.re.kr				
<p>※ 답례품 지급 관련 기입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padding: 5px;">응답자 성명</td> <td style="width: 40%; padding: 5px;">연락처 (휴대전화)</td> <td style="width: 30%; padding: 5px;"></td> </tr> </table>			응답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응답자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항

문1.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경영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 ② 비교적 좋아졌다
- ③ 변화없다
- ④ 다소 나빠졌다
- ⑤ 매우 나빠졌다

문2. 귀하께서는 영업하는데 소요되는 고정비용 중 어느 항목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대료
- ② 인건비
- ③ 공공요금
- ④ 대출이자
- ⑤ 4대 보험료
- ⑥ 기타()

문3.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매출액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상승했다
- ② 다소 상승했다
- ③ 변화없다
- ④ 다소 하락했다
- ⑤ 매우 하락했다

문4.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상승했다
- ② 다소 상승했다
- ③ 변화없다
- ④ 다소 하락했다
- ⑤ 매우 하락했다

문4-1.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임대료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상승했다
- ② 다소 상승했다
- ③ 변화없다
- ④ 다소 하락했다

- ⑤ 매우 하락했다

문4-2.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인건비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상승했다
- ② 다소 상승했다
- ③ 변화없다
- ④ 다소 하락했다
- ⑤ 매우 하락했다

문4-3.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공공요금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상승했다
- ② 다소 상승했다
- ③ 변화없다
- ④ 다소 하락했다
- ⑤ 매우 하락했다

문4-4.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최근 대출이자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상승했다
- ② 다소 상승했다
- ③ 변화없다
- ④ 다소 하락했다
- ⑤ 매우 하락했다

문5.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6.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지원을 선호하십니까?

- ① 매출액 기준 현금 지원
- ② 고정비용 기준 현금 지원
- ③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 ④ 기타()

문7.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받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받으시는 것을 선호하십니까?(1순위, 2순위)

- ① 임대료
- ② 인건비
- ③ 공공요금

-
- ④ 대출이자
 - ⑤ 4대 보험료
 - ⑥ 기타()

부록2: 소상공인 지원제도

부표 2-1 | 주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지원제도		세부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성장촉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 업체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한도),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2~0.4%p 적용,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포함 5년
	일반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제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이 대상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6%p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소공인특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의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이 대상 대출한도 5억원(운전자금 연간 1억원 한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4~0.6%p를 적용한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청년고용특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한 사업성 및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 또는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중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 대출한도 업체당 1억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0~0.4%p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형소상공인 또는 스마트공장으로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혁신형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등급 1~5 Level 기업이 대상 대출한도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추가 가산금리 0.2%p를 적용하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포함하여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역별·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 예방과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의 안정 도모 시스템 내 선택영역에 대한 상권평가, 업종분석, 인구분석, 소득 및 소비, 지역분석 정보를 제공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밀착 분야 틈새시장의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용자(최대 2천만원) 지원 후 성실실패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을 최소화

<p>신사업창업사관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창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준비된 창업지원으로 강한 소상공인 육성의 기반을 마련 지원규모는 15개 지역에 연간 약 500명이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모델 검증 등 온·오프라인 실습형 점포경영체험 등을 제공
<p>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경영안정화와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중심 사이버 평생학습을 제공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공간의 제약 때문에 면대면 교육을 받기 힘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
<p>소상공인 경영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성과 확대 및 매출증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개선 및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방식의 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기술 습득 등 교육, 업종별·대상별 온라인 실시간 교육 등을 실시
<p>소상공인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개선 바우처를 제공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분야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p>스마트상점 기술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사업장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마트 기술을 적용·보급하여 서비스 및 마케팅 혁신 '스마트 상점'을 확산 선정된 스마트 상가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래,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 혹은 스마트 오더를 도입하고자 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하여 지원
<p>소상공인 성장지원</p>	<p>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의 높은 비용 결제시장에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제로페이(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확산하여 0%대의 결제수수료 구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따라 0~0.5%의 결제수수료를 적용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가맹점의 경우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QR키트를 제공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 경품 및 리워드 등의 혜택을 제공
<p>온라인 판로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 O2O 사업으로 구분 교육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교육·상담을 통해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활용역량을 제고 O2O는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O2O플랫폼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거나 O2O서비스 활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실습교육으로 온라인 판로채널 입점방법 및 판매전략 등을 제공하고, O2O플랫폼 배당 대행비, 이용고객 홍보비, 광고비, 앱 메인 노출 등을 지원
<p>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랜 노하우를 가진 우수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전 업종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백년가게로 선정, 업력 15년 이상 숙련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여 인증판 제공, PB상품 출시

		등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맞춤형 홍보지원, 컨설팅 지원, 시설개선 지원, 혁신형소상공인 급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서비스 혁신의지와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교육 및 성공CEO의 노하우 전수, 맞춤형 보육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노하우 전수 및 맞춤형 보육, 상품개선, 홍보지원,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슈퍼 협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세일전, 물류운영 혁신 등 동네슈퍼의 협업 활성화를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등 동네슈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산지 농산물 등 전국규모의 동네슈퍼 할인판매 행사 추진, 모바일 배송서비스, 로컬푸드 유통 등 동네슈퍼의 유통 판로지원 및 거래 활성화, 유통시장 정보제공, 점포운영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등의 지원
스마트슈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슈퍼의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성공모델을 육성 점포면적 165m²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를 대상으로 비대면 소비확산에 대응하여 동네슈퍼에 야간 무인점포 전환 지원, 점포경영 스마트화 전문 컨설팅 제공, 모바일 비대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지원 등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조직화 및 협업을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 소상공인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업 등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지원, 소셜커머스, 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교육 및 컨설팅, 인큐베이팅, 네트워크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및 중소 프랜차이즈를 위한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사업 상생의 성과가 우수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BM분석 및 체계구축, BM전환, 브랜딩·디자인구축, IT환경 구축, 스마트화, 해외진출 등 성장단계에 맞는 필요비용을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집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적경제기업(업력 4~10년차)을 대상으로 기업진단, 연구개발, 전문교육,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취업·재창업 등 재기여건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도전을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용, 재도전장려금, 전직장려수당 등 자금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재창업멘토링, 법률자문 및 채무상담 등 컨설팅 지원, 취업교육 및 이론·체험형 재창업 교육 등 특화아이템 개발, 교육지원,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비용 등을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고용보험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 공정에 디지털기술(AI, IoT 등) 접목을

	<p>통해 소상공인 작업장의 스마트화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스마트공방 구축 S/W, 연구시설, 장비 등의 임차비,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스마트공방 구축 S/W, 공정, 제품 개발 등 용역비 등을 지원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확보와 매출향상을 지원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 입점비, 국내·외 온라인을 입점 및 광고비, 눈,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카탈로그 등 디자인 및 홍보영상 제작비용, 홈쇼핑, 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용 등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지원
클린제조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여 근로환경의 개선 및 오염물질의 저감, 에너지의 효율화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제품생산 능력 향상을 촉진 소공인을 대상으로 조명시설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가스누출, 누수, 장비 과부하 방지 등 에너지 효율개선, 제품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지원, 근로자 사용장비 최신화, 효율화,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등 근로환경개선, 재해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장치 지원 등 안전상의 조치품목 지원, 그 외 사전진단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품목을 지원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공인 집적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지원대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소공인DB 구축, 인력정보 제공, 기타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기본사업과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스마트 역량 배양 등을 위한 컨설팅, 교육사업, 공동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업종 등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기반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 전시장, 공동 창고, 공동 장비실, 교육장 등 공동기반시설의 구축을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기반시설 구축비용의 2/3 이내 국비 지원
복합지원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인 집적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획·디자인 → 제품개발 → 전시·판매 등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합지원센터 구축비용 중 1/2 이내 국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p>주차환경개선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전통시장 인근의 공용·사설 주차장의 이용을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국비 60% 이하 지방비 40% 이상 매칭하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거나 전통시장 인근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의 주차장 또는 전통시장 인근 사설 주차장의 사용비용을 지원
	<p>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설비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상인점포의 전선현황을 정비하여 화재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구축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전선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개별 상인점포의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발화요인을 조기에 감지하고, 소방서와 해당상인에게 통보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점포별 화재알림시설(연기, 불꽃, 온도감지기 등) 및 시장 공용부분 화재감시용(방법기능 포함) CCTV 설치 등을 지원
지역선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대표적 시장 및 특성화 성과가 우수한 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이자 롤모델로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 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및 지자체 종합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이 대상 한류의 트렌드와 외국인이 원하는 취향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 개발, 외래 관광객 수용기반 조성(간편결제, 사후면세점, 관광통역 안내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 경제형 서비스 제공(미니식물원, 작은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타 시장 또는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형 수익모델 개발 및 추진 등을 지원
문화관광형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고유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형 프로젝트를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시장, 상권활성화지원사업, 지자체 종합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곳이 대상 지역특색 연계 시장투어코스,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문화 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등)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에 대한 판로지원, 시장테마를 접목한 노후시설 및 공용공간 디자인 재생(골목미술관, 복합문화공간, 아트거리 등) 등을 지원
특성화 첫걸음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사업경험은 부족하나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정하여 5대 핵심과제를 집중 수행함으로써 특성화 기반조성을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회비 납부율, 상인회 가입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각 60% 이상을 충족하는 시장이 대상 ①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온누리상품권 등 편리한 지불결제, ②가격 및 원산지 표시, 교환/환불/AS, 친절맞이 인사 등 고객신뢰, ③상품진열, 시장 공용공간 및 점포별 청결상태 등 위생청결, ④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정기 이사회(총회) 운영 등 상인조직 강화, ⑤화재예방훈련, 소화기 비치, 의용소방대 구성 등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수행
청년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 소통, 쇼핑 등이 융합된 복합몰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일 자리를 창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m²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이 대상 청년점포 및 기반시설(진입환경 개선, 바닥정비, 공용공간, 전기수도가스 등), 창업교육 및 컨설팅(입점지원, 창업교육, 메뉴개발, 경영컨설팅 등), 홍보 및 마케팅(홍보물제작, 공동이벤트, 온라인 및 SNS마케팅 등)을 지원
청년상인 도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경영진단, 컨설팅, 제품개선, 홍보 등 자생력을 지원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중 지자체 또는 상인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제품개선, 메뉴개발, 디자인 개선, 시제품 개발, 법률자문 등 맞춤형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저가의 보장성 공제 사업을 도입, 화재 피해 발생 시 가입한도 내 실손으로 보상 가입한도(최대 건물 3천만원, 동산 3천만원) 내 보상이 이루어지며,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기본상품(재물 손해),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화재벌금 특약,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등의 가입이 가능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년 단위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며, 전통시장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 안전점검 및 시장별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
상권르네상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과 그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거점공간 조성,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특거거리 디자인 및 조성, 환경정비, 상징물 설치 등 상권환경개선과 홍보·마케팅, 상권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발, 핵심포 운영 등 상권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 사업부문을 자율적으로 선택·추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 중 상인조직을 갖춘 곳과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를 대상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등 사업지원 바우처와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 인력지원 바우처, 민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바우처 등을 제공
온누리상품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가능하고 환전이 편리한 전국 공동 상품권을 발행·유통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 지류(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전자(5만원권, 10만원권, 무기명충전식), 모바일상품권(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의 종류가 있으며, 시중 은행과 금융기관, APP 등을 통해 판매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지원 시책자료(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재리

부록3: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제도

부표 3-1 | 코로나19 이후 주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지원제도	세부내용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20.6.26 ~7.12)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동행)한 대규모 할인행사로, 전통시장(633개) 및 착한슈퍼(4,461개), 제로페이 가맹점(55만여곳), 온라인쇼핑몰(16개), 가전·자동차·백화점·대형마트 등 제조·유통 대기업 등이 참여
	동네슈퍼 공동세일전('20.12. 19.~12.27)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슈퍼, 나들가게 세일행사에 필요한 소분 및 배송비용 등 물류비, 고객사은품,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물품에 대해 점포당 25만원(국비 100%)을 지원하였고, 6,546개 동네슈퍼 및 나들가게가 참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부담완화 및 가입자 이용편의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대출 이자율을 기존 3.4%에서 2.9%로 0.5%p 인하하고, 부금납부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공제 가입자격·해지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8.12일 시행)
	온라인 진출 및 스마트화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전담하는 '스마트소상공인 육성과'를 신설('20.1)하여 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 발굴, 소상공인 간편결제 확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지원 추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화 흐름의 가속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20.9.17,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전통시장,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디지털 상권리네상스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의 혁신모델 확산전략 및 로드맵 등을 제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VR·AR, IoT 등의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했으며,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시범사업 추진('20. 82개사) 소상공인 비즈니스모델·생활혁신 개발 과제에 R&D 지원 및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육성사업 신설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긴급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자금(대리대출, 직접대출) 총 252,660건(10조 2,684억원)을 접수하여 131,941건(2조 9,583억원)을 실행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대출 방식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3.27~)하여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지원에 집중하고, 평균 5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번호표발급기, 스마트대기시스템, 온라인확인서 발급, 온라인 대출신청 등 오프라인 접수절차 개선 및 온라인 접수도 실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천만원 긴급대출' 실시(3.25~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7.4만건, 7,723억원) 신용 4등급 이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여 4~10등급에 93.7%(7,182억원)을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위기 상황 시 부처간 협업 및 정보공유, 대출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실시

<p>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신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금융회사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였다. 전국가적인 비상상황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 영업피해 업종, 경영애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시행(9.2조원 / 339,515건)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업은행 초저금리 협약보증” 시행(이자율 1.5%대, 6.9조원) 및 보증료를 0.3%p 인하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히 피해가 큰 “관광업종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협약보증”도 시행(1,405억원 / 3,255건) 하였는데, 관광업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서비스업종의 경우 교육부와 부처 간 협업을 실시 	
<p>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p>	<p>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3.3조원, 294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 새희망자금은 전국 12개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 등 5개 시설 집합금지 및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영향에 따라 지원 피해 유형에 따라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150만원(영업제한), 200만원(집합금지) 등으로 지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선별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지급대상자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24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집행과정 중 미신청자에게 문자·우편·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안내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시스템(새희망자금.kr)을 구축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계좌 검증 후 신청·접수 받아 익일 현금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함
	<p>버팀목자금 지급 (3.8조원, 276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을 지급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DB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 버팀목자금은 2021년 2월 10일까지 31일 간 소상공인 276만명에 3조 8339억원의 지원
	<p>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 기존 버팀목자금은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을 지원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의 지원
<p>코로나19 대응 소공인 지원</p>	<p>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2020년 8월 16일~ 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900만원을 업종·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78만명에 대해 최대 400만원을 지원 예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통해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 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지원 예정
<p>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상권 지원</p>	<p>신규판로 개척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소상공인인 소공인에 대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공인의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 • 온·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SNS 홍보 등 266개 소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 • 종합편성 방송에서 스토리가 있는 백년소공인 방송영상 방영 및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을 통해 성과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p>스마트기술 보급, 소공인 혁신거점 확대, 우수 소공인 발굴 및 성과 모델 확산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공인 스마트기술 보급, 작업장 환경개선(한국판 뉴딜반영),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 제품기술 지원 등 개별 소공인에 대한 종합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소공인의 스마트 기술 등 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20년 2,857명)하고, 혁신거점 복합지원센터(신규 3곳) 및 공동기반시설(신규 7곳)을 확충 • 소공인의 기능·기술 계승과 보호를 위해 백년소공인을 지정하고 사례집 및 언론홍보 등 성과모델을 확산('20년 244개)하였는데, 백년소공인에 대해 현판식 개최, 온라인 홍보(유튜브 영상홍보, SNS용 카드뉴스, 100선 e-book 게재), 방송영상 제작·송출(채널MBN), 백년소공인 우수소개집 제작·배포 등의 홍보가 이루어짐 • 열악한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위험요소 제거 등 제품 생산 능력 향상('20. 1,800개사)도 함께 지원
	<p>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판매 다각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전통시장·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였는데, 1·3차 추경예산 편성 시 온누리상품권 1.5조원의 추가발행을 위한 예산 2,070억원 추가 • 설·추석 명절기간 및 코로나19 대응기간(4월)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추진, 코로나19 대응 특별 할인판매('20.4.20~4.29, 4,586억원), 설 명절맞이 특별 할인판매('20.1.1~2.29, 5,421억원), 추석 명절맞이 특별 할인판매('20.9.21~9.29, 7,781억원) 등의 특별판매 추진
	<p>골목형상점가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 및 시행령('20.8)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음식점 등 궤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밀집구역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p>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통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상점가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외에도 주차장 건립 지원, 공동마케팅·교육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현대화 지원(지자체) 등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수혜가 가능하도록 함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21년 1곳)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를 개최(8.27)하여 2021년 신규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인프라 지원도 이루어졌는데, 전통시장디지털매니저(4곳 45개 시장 지원), 청년디지털인력 채용(1,500명)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
코로나19 대응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의3을 근거로 시행되며,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20년 귀속의 경우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증 발급 必),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형업 등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적용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지원 시책자료(내부자료) 및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일자 2021. 7. 20.)을 참고하여 연구진 재정리

수시 21-11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저 자 이태리, 이운상, 권건우, 남윤형, 전홍규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행 2021년 9월 1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가격 비매품

I S B N 979-11-5898-655-1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시시오.

이태리, 이운상, 권건우, 남윤형, 전홍규. 2021.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In the Era of Corona 19,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 제1장 서론
- 제2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제도
- 제3장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해외 지원제도
- 제4장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및 영향요인 분석
-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